

#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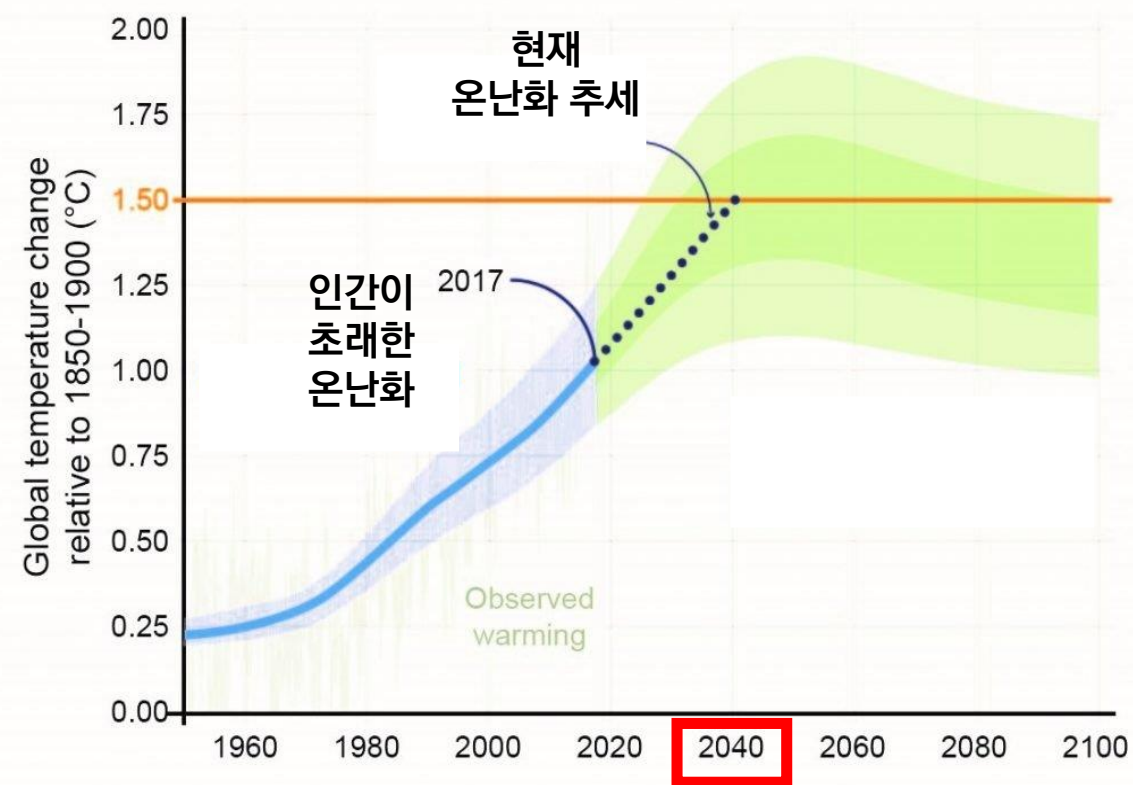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유진

leeyujin2010@gmail.com

# 1.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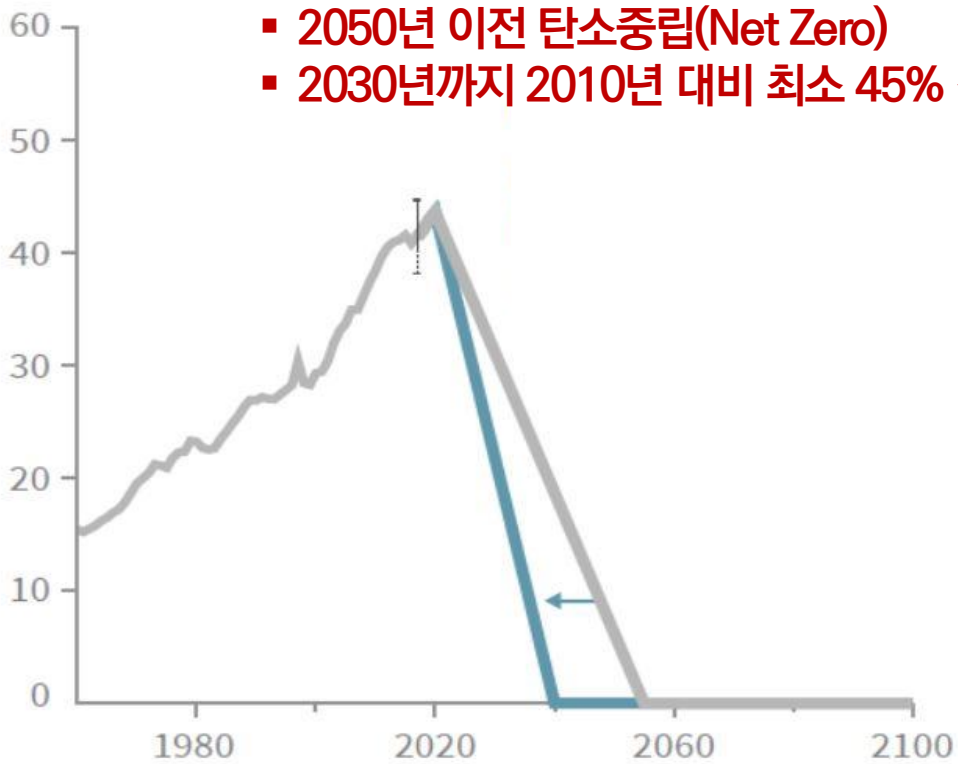
# 1.5℃ 도달 시기 전망과 탄소중립

## 지구평균기온 1.5℃ 상승 도달하는 시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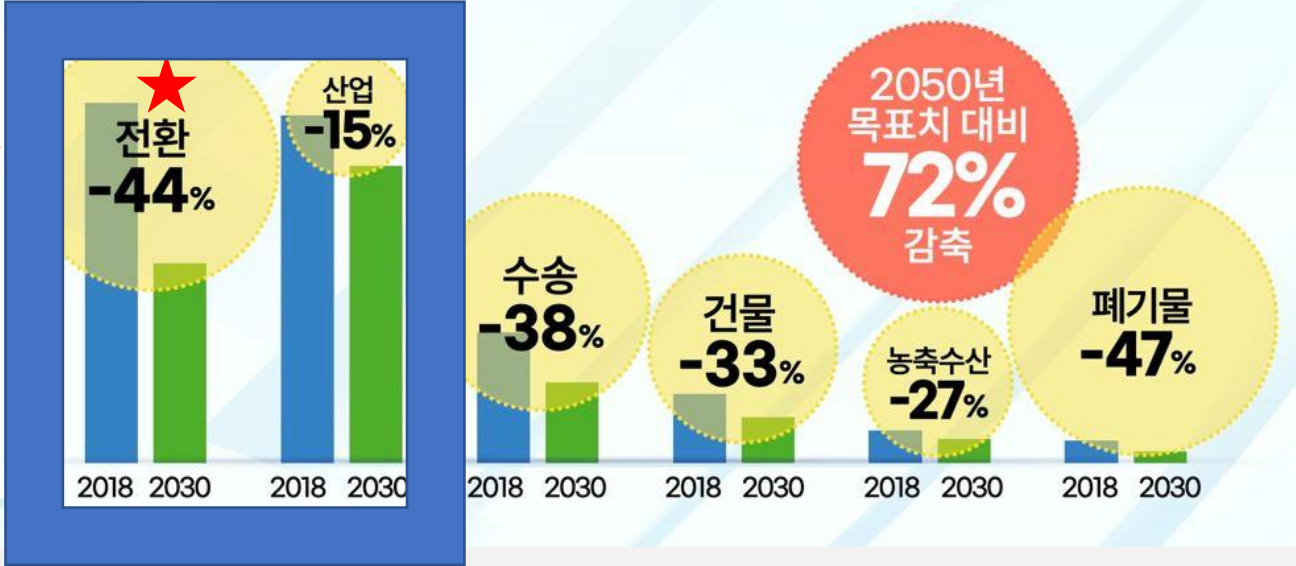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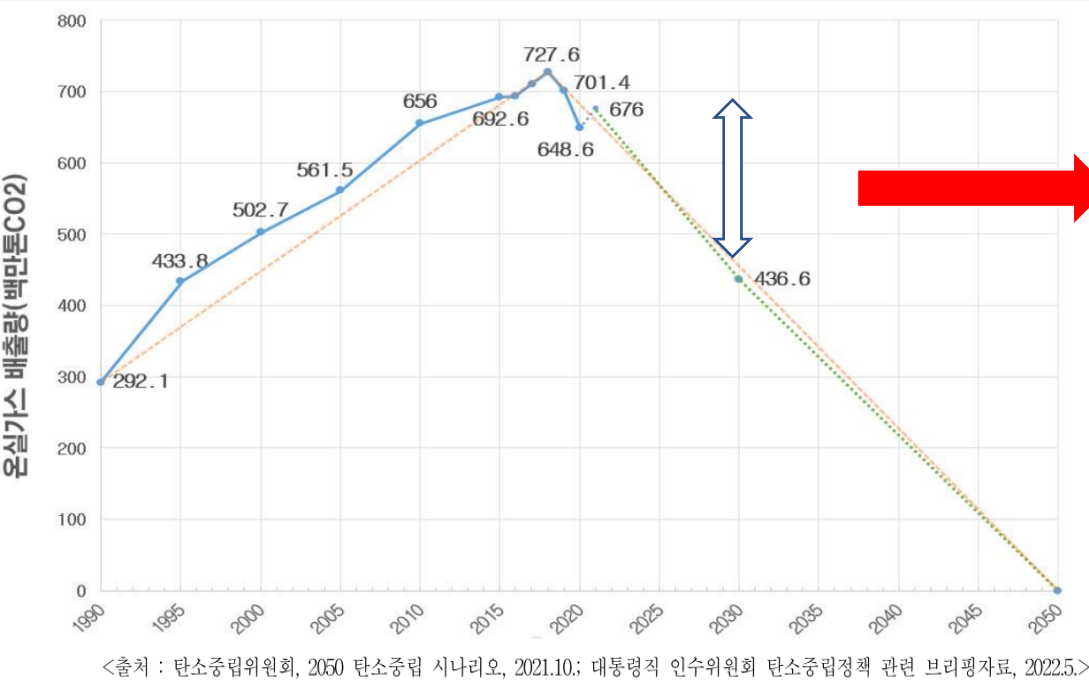
**탄소중립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간활동으로 증가하지 않는 순 배출량 '0'**

- 2050년 이전 탄소중립(Net Zero)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



Graphic from the IPCC's special report on 1.5C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와 2030년 NDC 부문별 감축률



출처: 그래픽디자인: SBS  
대통령소속2050탄소중립위원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boardNo=100&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5>, 2022.03.07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전환에서 1억1,900만 톤, 산업에서 3,700만 톤, 수송에서 3,700만 톤 줄여야



# 정의로운 전환이란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와 사회에게 유해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일자리가 안전하고 더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자 원칙이다” (김현우, 2021) – 정의로운 전환 조건 분석 및 전략 개발

##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7대 원칙

- 적극적으로 탈탄소화를 고취하기
- 해당 부문에서 탄소 잠김과 더 많은 패배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 영향받는 지역 지원하기
- 폐쇄나 축소에 영향받는 노동자, 가족과 더 넓은 공동체를 지원하기
- 환경 피해를 복원하고, 관련된 비용들이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 기존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 포괄적이고 투명한 계획 절차를 보장하기

자료: Aaron Atteridge and Claudia Strambo, Seven principles to realize a just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SEI policy report, 2020

## ILO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

-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와 경로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합의
- 작업장에서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
- 환경적 도전과 기회에 있어서 성별 차원에 대한 강력한 인식 및 공정한 결과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 전환을 위한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 환경, 사회, 교육, 훈련, 그리고 노동 영역을 포괄하는 통일성 있는 정책의 마련
-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실직과 해고와 관련된 사회적 보호, 직업능력개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
-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각 국가의 발전단계, 경제부문, 기업 업종과 규모 등 특수한 조건을 고려함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하나의 정책은 없음)
- 국가 간의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자료: ILO, 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 2015

#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기본법 제 2조(정의)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 ·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7장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제49조(사업전환 지원)  
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총괄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영향평가</li> <li>온실가스감축인자예산제</li> <li>배출권·목표관리</li> <li>탄소중립 도시</li> <li>지역 에너지 전환</li> <li>녹색건축·교통</li> <li>흡수원·CCUS</li> <li>국제 감축사업</li> <li>종합정보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시·예측</li> <li>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지방,공공기관)</li> <li>지역 기후위기대응</li> <li>물 관리</li> <li>녹색국토</li> <li>농림수산 전환</li> <li>적응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안전망</li> <li>특별지구</li> <li>사업전환</li> <li>자산손실 최소화</li> <li>국민참여</li> <li>협동조합 활성화</li> <li>지원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경제</li> <li>녹색산업</li> <li>녹색경영</li> <li>녹색기술</li> <li>조세제도</li> <li>녹색금융</li> <li>정보통신</li> <li>순환경제</li> </ul>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 기금			

# 탄소중립기본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p><b>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b></p> <p>① 정부의 현황 파악, 지원대책과 방안 마련 책임</p> <p>②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 방안 마련</p>	<p><b>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b>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b>해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의 주민 및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b>1.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실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b></p> <p><b>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또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원</b></p>
<p><b>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b></p> <p>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정에서 급격한 변화 받는 지역 지정</p> <p>② 정부의 지원대책 :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재취업 지원, 새로운 산업 지원, 고용촉진 산업 지원, 세제상의 지원</p>	<p><b>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b>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을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p> <p><b>1. 지정 대상 행정구역 2.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b></p> <p><b>3.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4.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b></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 전체 지정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수립된 지원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p> <p>⑩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매년 해당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p>

# 탄소중립기본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b>제49조(사업전환 지원)</b> ①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전환지원 지원 ②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제50조(사업전환 지원)</b>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이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등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을 전환하려는 업종 2. 사업전환계획 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2.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 4. 그 밖에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b>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b> 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이상 해당 기업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시책 마련 ② 정부는 경제주체가 기후위기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하는 제도 마련	<b>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b>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b>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b> ① 정부는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b>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b> ①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 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 3.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b>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 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각각 같은 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b>한국산업기술진흥원</b>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b>한국고용정보원</b>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두려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b>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b> ④ 법 제5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동향의 조사 및 연구 2. 지역별·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 지원 4.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고용·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⑤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관계부처합동, 2021.7.22)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1.7.22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관계부처합동, 2021.7.22)

## ※내연기관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지원

\* (석탄화력발전) '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지(24기 LNG 전환)

\* (자동차) 수소·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 '20년 2.8% → '25년 18.3% → '30년 33.3%

첫째,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 지원

둘째, 불가피한 인력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지원도 강화

셋째, 석탄발전 및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① 상생형 일자리,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통해 지역별로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석탄발전 소재 지역에 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산업 육성

②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확대

※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등에 전담 추진기관 신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 중앙과 지역단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구성, '석탄화력발전분야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등



#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 추진 상황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54인)	구분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
<p>가.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노동전환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안 제3조).</p> <p>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7조).</p> <p>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전환분석센터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설치하고, 노동전환분석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p> <p>카. 이 법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함(안 제17조).</p>	주요 내용	<p>가. 이 법의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통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p> <p>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p> <p>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b>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b></p> <p>라.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b>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b>의 설치 근거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처의 설치 근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p> <p>마. <u>사용자가 사업에 관한 중요한 계획 수립 및 결정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등과 공동 결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등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안 제19조 및 제20조).</u></p> <p>제18조(재원) 이 법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사업은 1. 일반회계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함</p>
<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U1J0Z9X0E1L1F0B5M8U3F2R0W1U0&amp;ageFrom=21&amp;ageTo=21">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U1J0Z9X0E1L1F0B5M8U3F2R0W1U0&amp;ageFrom=21&amp;ageTo=21</a>	의안 정보	<a href="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1A1G2V0Z3B1T0Z4V4C5J8O6D9M7">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1A1G2V0Z3B1T0Z4V4C5J8O6D9M7</a>

# 금속노조의 공동결정법 제정과 노동조합법 개정 요구



- 공동결정법의 주요 특징은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 여기에 참여하는 노동의 단위는 노동조합에 국한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한다.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은 노동자라도 산업전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

출처: 한재각, 기후위기와 노동위기 (서울노사민정협의회(2021. 10, 27)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지향할 세 가지 방향

- 양질의 일자리 유지·창출
- 노동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환경 구축
- 사회 공공성 강화

두 가지 원칙

- 노동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산업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 여러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합의한 사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산별교섭 법제화

공동결정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담겨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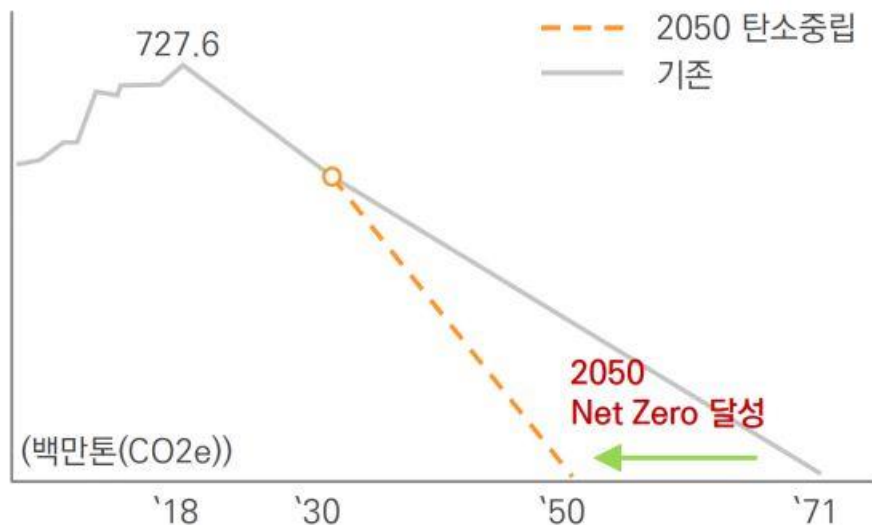
# 2022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021.12.20)

## 4 구조전환 분야

### 탄소중립

###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감축경로 ]



####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상향

\* (기존) '18년대비  $\Delta 26.3\%$   $\rightarrow$  (상향) '18년대비  $\Delta 40\%$

#### ✓ 탄소중립 재정투자 보강 및 제도적 기반 확충

\* '22년 12조원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 ✓ 기업근로자 차원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 선제적 사업전환 수요 발굴, 직무전환 훈련 강화 등

## 2022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021.12.20)

- ② (재정지원) 탄소중립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중점분야에 '22년 약 11.4조원 재정투자 실시

### < 탄소중립 재정투자 분야별 규모 >

4대 중점분야	규모	주요 내용
① 경제구조 저탄소화	7.9조원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대전환
② 저탄소 생태계	0.8조원	신유망산업·기업 지원, 인력양성, 순환경제
③ 공정한 전환	0.5조원	취약산업·계층 지원, 기후변화 적응지원
④ 제도적 기반	2.2조원	녹색금융, R&D, 제도기반, 국제협력
합계	11.4조원	



# 2022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021.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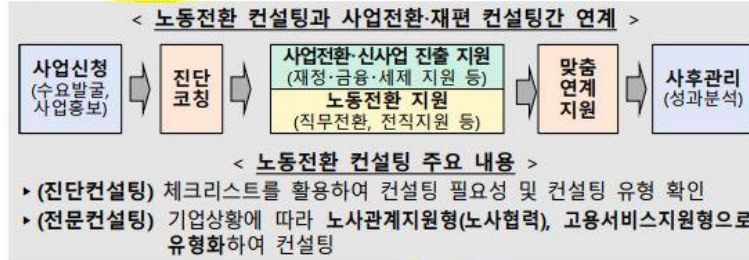
## [2] 기업의 사업재편·노동전환 지원 본격화

### 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본격 이행

- ① (수요발굴·관리체계) 지원전담기관으로 「사업구조개편 지원센터」를 대한상의 내 설치('22.1/4)하고, 사업구조개편 파트너십 본격화  
\*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통해 추진과제 점검, 사업재편·노동전환간 연계 도모
- ② (법 개정)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법 개정('22~)
  -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범위에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규제특례\* 대상 일부 확대  
\* 계열사 주식소유금지 3년간 적용유예,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 (사업전환법) 지원범위를 탄소중립 등 신사업 분야 유망품목 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사업전환 제도\* 신설  
\* 대·중소협력사간 또는 이중업종 기업간 공동 사업전환시 일괄 승인후 자금 지원
- ③ (인센티브 강화)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R&D 지원, 펀드조성 및 융자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의 효율적 활용 추진
  - (사업재편 R&D) 사업재편 기업들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지원 확대('21년 100억원 → '22년 180억원)  
\* '21년 기 승인 연속과제 20개사(90억원) + '22년 신규과제 20개사 선정(90억원) 예정
  - (사업재편 펀드) 5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 조성('22.1/4)  
\* 주목적 투자의 50%(전체의 30%)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투자 필요
  - (사업전환 융자지원) 중진공 융자자금 확대('21년 1,000억원 → '22년 2,500억원)를 통해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센터」 설립('22년 10개)하여 컨설팅·사업전환자금 지원

## ② 취약산업에 대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 ① 저탄소·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역량강화·직무전환·재취업지원 강화
  - (직무전환)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5만명)」을 신설하고, 소요 훈련비 전액 지원(1회 한도)
  - (전직지원) 장기유급휴가훈련을 통한 위기지역 종사자의 고용 유지 및 이·전직 지원 강화(경남도, 부산, 인천 중구 시범추진 중)  
\* 위기산업 종사자 대상 유급휴가 훈련시 훈련비·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 (기업지원) 노동전환지원금(최대 300만원)을 신설('22.1~ '23.300명)하고, 기업에 노동·사업전환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실시
- ② 사업재편·전환 지원기관(대한상의, 중진공) 내 「노동전환 지원센터」를 개소('22.3월)하고, 사업재편·전환 지원과 연계 강화



- 한국고용정보원 내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신설('22.1월)하여 구조 전환 직무분석 및 인력수급 전망, 지역·산업 모니터링 수행  
\* (산업·직종 전망반) 산업전환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군) 선제 파악 (노동전환 지원반) 구조전환에 영향 받는 취약업종내 직종별 직무분석·성공사례 발굴
- ③ 사업구조 개편 단계에서부터 노동전환이 고려되도록 연계 추진
    - (사업재편) 사업재편 심사시 기업 노동전환 계획이 고려되도록 기업활력법 실시지침 개정(기업활력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추진)  
\*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실업예방 및 재직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계획

#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추진현황 : 22차 일자리위원회 보고안건

산업동향

## 정부 '공정한 노동전환' 예산 1조385억원 편성

내년 하반기 '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위 22차 회의서 보고

연운정 기자 입력 2021.12.23 07:30

댓글 0

가



◇민주노총 “노동자 참여 속 산업전환 대화해야”=정부는 이와 함께 2025년까지 8천명, 2030년까지 2만명의 에너지 기술인력 육성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과 한국판 뉴딜로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녹색건축 정책을 통해 내년 2만5천개 일자리 창출을 전망한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D(Data)·N(Network)·A(Ai) 분야 일자리 지원방안’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및 일자리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의결하고,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명 미만 사업장 및 특고·플랫폼·청년·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일자리 대책과 노동기본권 보장 대책이 집중돼야 한다”며 “기후·디지털 전환 등 산업전환 대책 관련해 형식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윤석열 정부의 국정 110대 과제 중 노동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 □ 과제목표

-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단절없는 일자리 이동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한 실업급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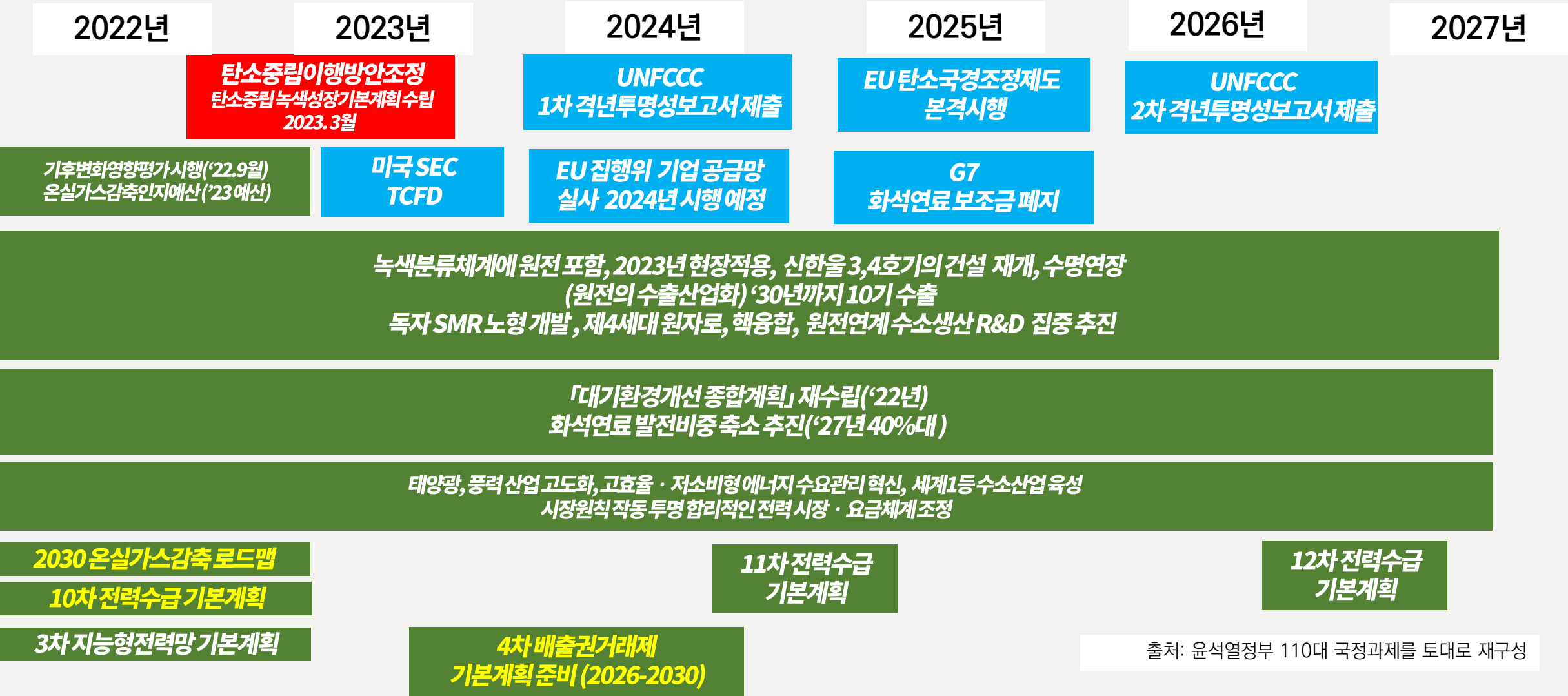
### □ 주요내용

-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 산업·기업 조기 포착,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 지원
  -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 확대
-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추진



# 윤석열 정부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 전망 (2022.5~2027.5)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2022년 3분기⇒ 2023년 3월) 온실가스감축 이행점검 평가도 늦어 짐



출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재구성



## 소결 : 정의로운 전환 법과 정책

-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행정문서에서는 ‘공정 전환’
- 정의로운 전환 관련법과 제도가 구축되는 시기, 고용노동부 5년 단위 고용노동 조사
- 탄소중립기본법 상 (7장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취업지원과 훈련에 집중되고 추상적인 반면, 기업 지원은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최소화 등 구체적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통과시 제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 수립해야 (현재 위원회 계류 중)
- 윤석열 정부 국정 110대 과제는 ‘공정 전환’ 개념 자체도 등장하지 않으며, 산업구조전환시 고용불안 최소화 관점으로 접근

## 2. 정의로운 전환 논의 흐름과 쟁점

- ① 사회적합의와 거버넌스
- ② 산업-사회-노동- 지역 전환 통합 접근
- ③ 정의로운 전환 기금

#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경향신문 특집 기획)

##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1)

### 사라지는 부품을 만드는 내연기관 노동자들

자동차부품 사업체 수

4700개

(1차 하청업체 824개 포함)

2019년 기준

자료: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전기차로의 100% 생산 전환에 따른 고용 전망

구분	고용 감소 규모
소재 전환	프레스 70% 이상 감소 차체 70% 이상 감소 도장 70% 이상 감소
동력원 전환	소재, 단조 업무 100% 감소 엔진사업부, 변속기사업부 100% 감소
부품 감소	의장 조립공 수 30% 감소 생산 물류 업무 30% 감소

자료: 현대자동차 노사공동 고용안정위원회, 2019년 10월

전기차 생산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국내 부품기업 수 추정 단위: 개

	전체 기업 수	감소 비중
엔진부품	1920	100%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643	70%
구동, 전달부품	1395	37%
자동차부품 제조업 전체	1만211	28%

내연기관차 부품 30%는 전기차에 안 들어가  
엔진 주변 부품 만드는 회사는 거의 절멸한다고 보면 돼  
하청 내려갈수록 자신이 만드는 부품이 사라지는지도 몰라  
완성차 노동자들도 라인자동화·전환 배치 등 불안 시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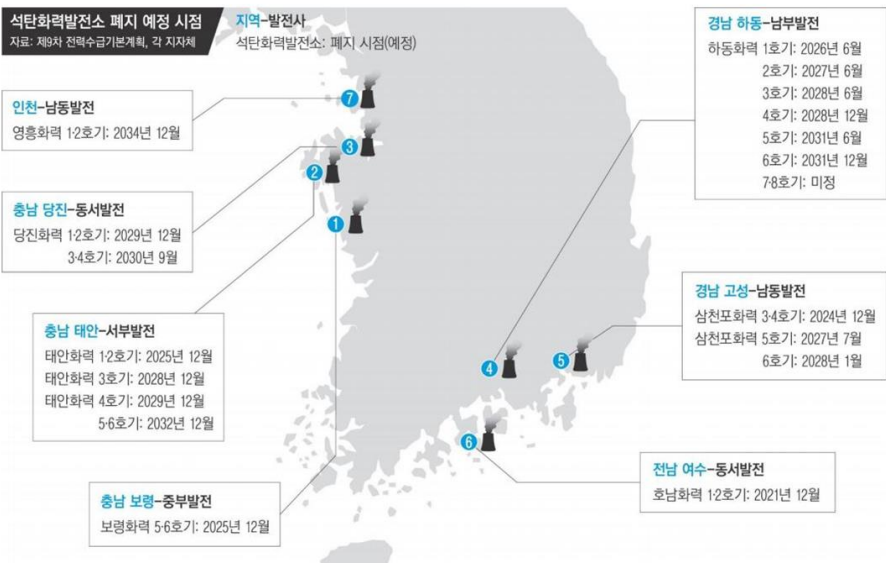
※ 통계청 2016년 '전국사업체 조사'의 자동차부품  
업체수를 기준으로 일본 자동차부품공업협회 감소  
비중을 적용한 수치  
자료: 금속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작성한 '미래형 자동차 발전방향과  
노조의 대응'(2019)

#### ■ '기업에만 정의로운' 전환

정부 정책은 기업에만 정의로워  
재교육 전에 일자리부터 만들어놔야

##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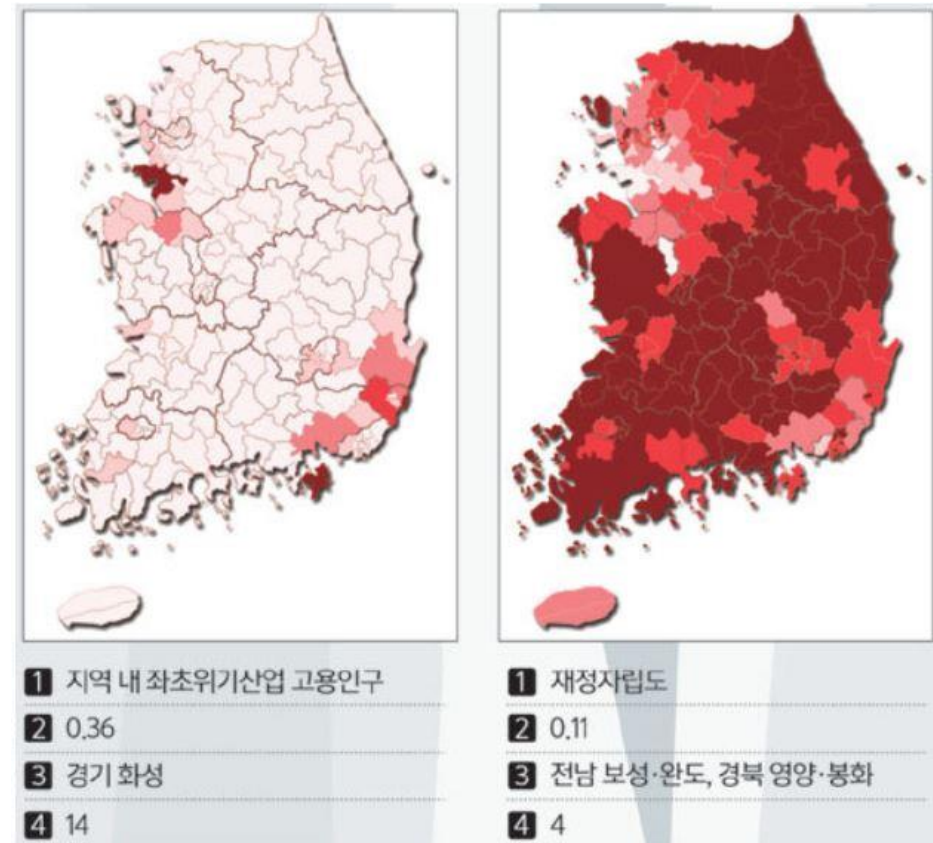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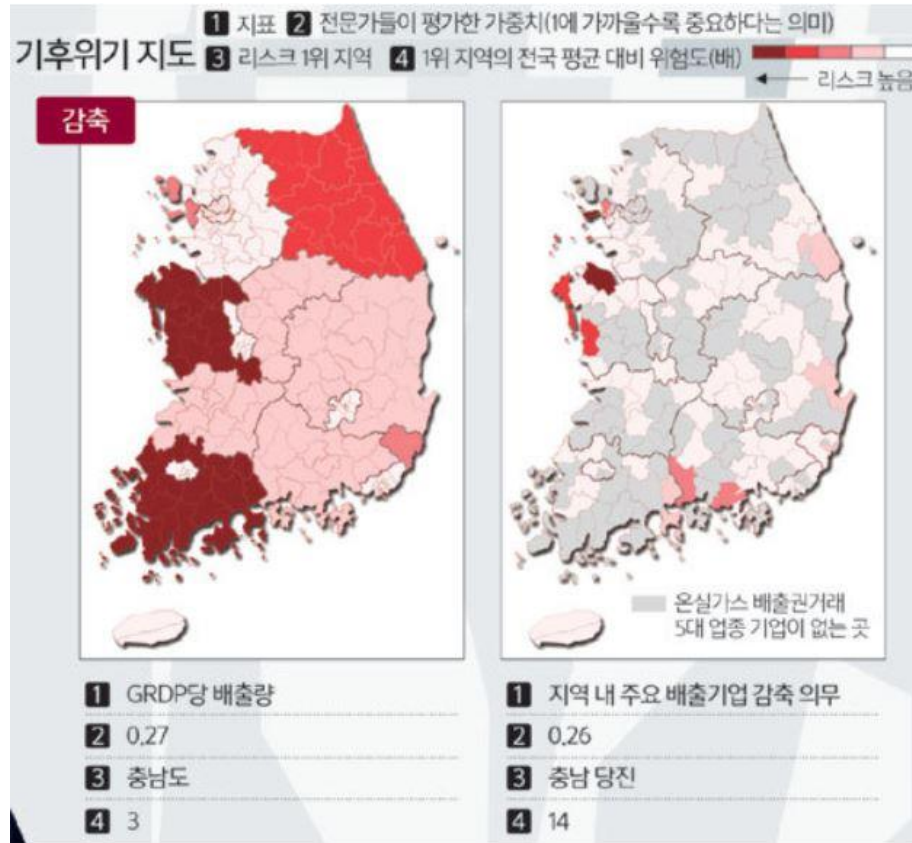
### 곧 사라질 직장에 다니는 석탄 노동자들



#### ■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폐지 일정

정확한 폐쇄 일정 아무도 안 알려줘 답답  
폐쇄 자체에 대한 의문과 불만 쌓이기도  
“현장 사람들에게도 이해와 동의 구해야”

# 지역별로 격차가 큰 전환 충격 (세계일보)



감축 리스크 △지역내총생산(GRDP)당 배출량과 △지역 내 주요 배출기업 감축 의무 △지역 내 좌초위기산업 고용인구 △재정자립도를 이용- GRDP당 배출량은 한 지역의 부가가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 충남 1위

# ① 사회적대화와 거버넌스

지역과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논의의 장 – 산업과 노동이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자 참여 공간 부재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2021.4.17.)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성윤모)와 대한상의(회장: 최태원)는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①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②그간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③탄소중립 전략을 논의, 이행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

출처: 산업부, 2021.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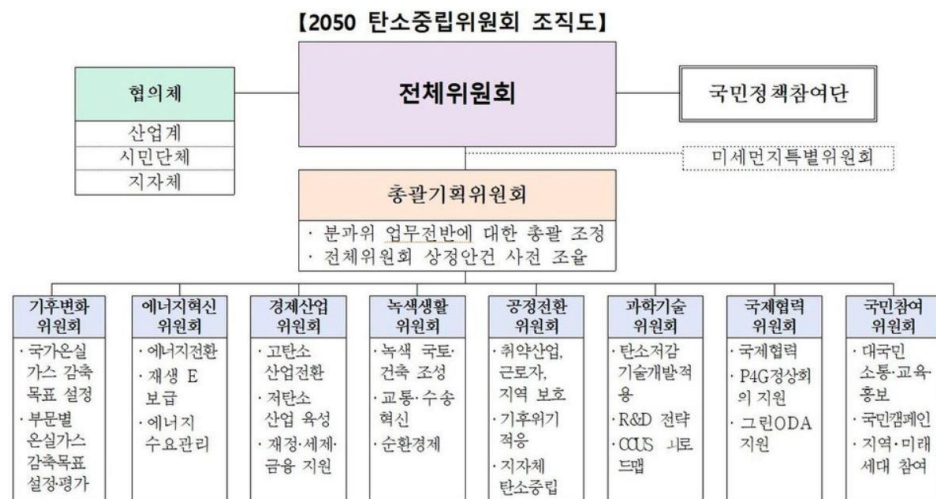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산하에 사업전환·노동전환 지원분과를 운영하면서 지원정책 추진(기획재정부, 2021.9.7.). 지원단 산하에 ①사업구조개편 지원(분과장: 기재부 차관보), ②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분과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두 개 분과위 구성

출처: 기획재정부, 2021.9.7



# ①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방안, 기후위기와 산업·노동전환 연구회의 사회적 대화 제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경사노위 소개    회의체 활동    소통과 협력    소식마당

회의체 활동    연구회·간담회    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 연구회

### 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 연구회

---

▶ 설치목적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산업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및 노사경 공동의 대안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제 발굴

▶ 주요 논의사항    01.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산업, 기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02.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방향과 과제  
03.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사경의 역할 및 협력 방안  
04. 향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주요 논의 의제 및 방향  
※ 논의 의제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논의시기    2021. 7. ~ 2022. 1. (편의사 여와 가함)

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방안들

○ 기후위기와 산업·노동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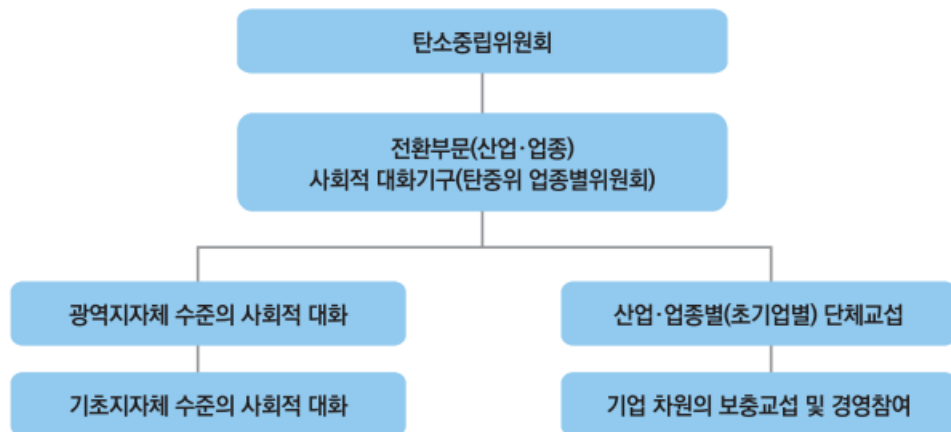
-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안 (2)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 노동계는 현재 상황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정책 전문성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함. 다만 반드시 노동계 및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이행력 담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책임있는 주체들로 구성(관계부처 및 사용자측 등), 논의 결과에 대한 법과 예산을 포함한 이행력 담보 등 노사정이 현장의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산업·노동전환 과정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 기제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 등 두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 기구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되, 양 기구 간 상호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의 부처들에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보이스 보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출처: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노동 전환의 주요 정책 과제-「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 연구회」결과 보고서 2022.2.22

# ①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 KEI 전환부문별 대화 기구 구성과 지자체 수준/산업 업종별 단체교섭 연계하는 투트랙 제안

그림 3. 중층적 거버넌스 예시



자료: 저자 작성.

출처: KEI 임형우; 이상엽; 최형식; 정은혜,  
신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  
[환경포럼] 2022-06-15

### 한국환경연구원(KEI)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는 단층적이 아닌 중층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경우 적용 범위가 전국과 지역 수준, 산업·업종과 기업별로 다양하며, 산업과 노동, 사회 및 지역 정책 등 의제도 중층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중층적 거버넌스의 예시로 ‘양날개 전략’ : 탄소중립위원회와 같은 전국 단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전환부문(산업·업종)별 대화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지자체 수준의 사회적 대화 운영과 산업·업종별 및 기업 차원의 단체 교섭 등과 연계하는 ‘투트랙 전략’ 제안

전국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총론이 논의되고 동시에 산업·업종 수준에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대화 및 단체 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 ①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 노동 전환 지원법(안) 거버넌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54인)	구분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
<p>제3조(기본원칙) ③ 노동 전환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p> <p>④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는 노동 전환 지원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p>	<p>주요 내용</p>	<p><b>제8조(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b> ①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p> <p><b>제9조(위원회의 구성)</b> 1.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6인 2.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위원 6인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6인 4.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6인</p> <p>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장 6인으로 한다.</p> <p>③ 일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p> <p>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p> <p>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p> <p>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의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협력업체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p> <p>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집단 및 영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전국적 규모의 자영업자·농어민·중소상공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기후위기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p> <p>⑥ 위원장은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p>



## ① 사회적대화와 거버넌스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대화 방식, 내용, 목적, 결과, 참여범위, 공간에 대한 사전 설계
-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 실질적인 참여의 구체적인 형태, 강은미 의원이 제안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조화와 관철  
“지역별로, 산업별로 다양한 유형과 경로가 가능해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 공정전환분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 연구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이 어떤 역할을 할지 추적해야겠지만, 지역과 산업별 움직임에도 관심을 뒤야 한다. 울산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 충남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협약, 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산업전환협약, 경남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경기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성(안) 등 최근의 변화가 주는 성과와 향후 과제를 탐색해야 한다.”  
출처: 이정필 <http://www.redian.org/archive/159822>
- 정의로운 전환 제도화를 위한 모두의 역량 강화

## ② 산업-사회-노동-지역 전환 통합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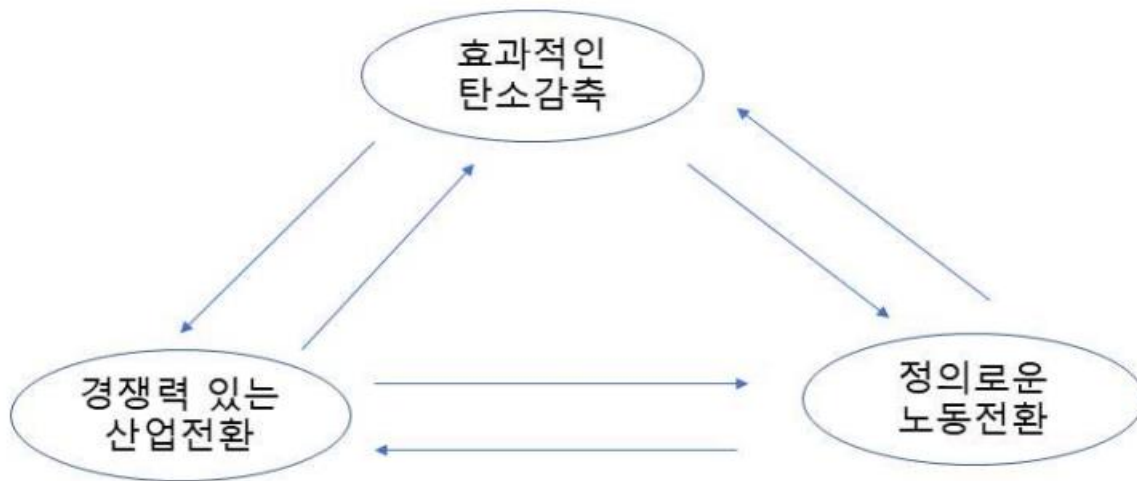
산업전환 기본계획과 노동전환기본계획을 분리해서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산업전환	노동전환	에너지전환
법안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약칭: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54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의원영 의원 등 31인)
제안취지	(특별법안 마련 중) 안정적 산업전환 근거로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 주요 내용 : ①탄소중립 전문기업 지정·육성, ②저탄소 제품·기술 시장조성 ③규제특례 근거 마련, ④취약 산업·기업지원 근거 마련 등 □ 산업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원칙*을 명문화하여 흔들림없이 추진 * ①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②중소·지역·전통산업 고려 정의로운 전환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1.12.10)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해당 발전사업을 추진해 온 발전사업자, 해당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소의 소재 지역 또는 건설이 예정된 지역, 그리고 해당 발전사업과 관련한 산업 등의 구조개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계획	산업전환기본계획	노동전환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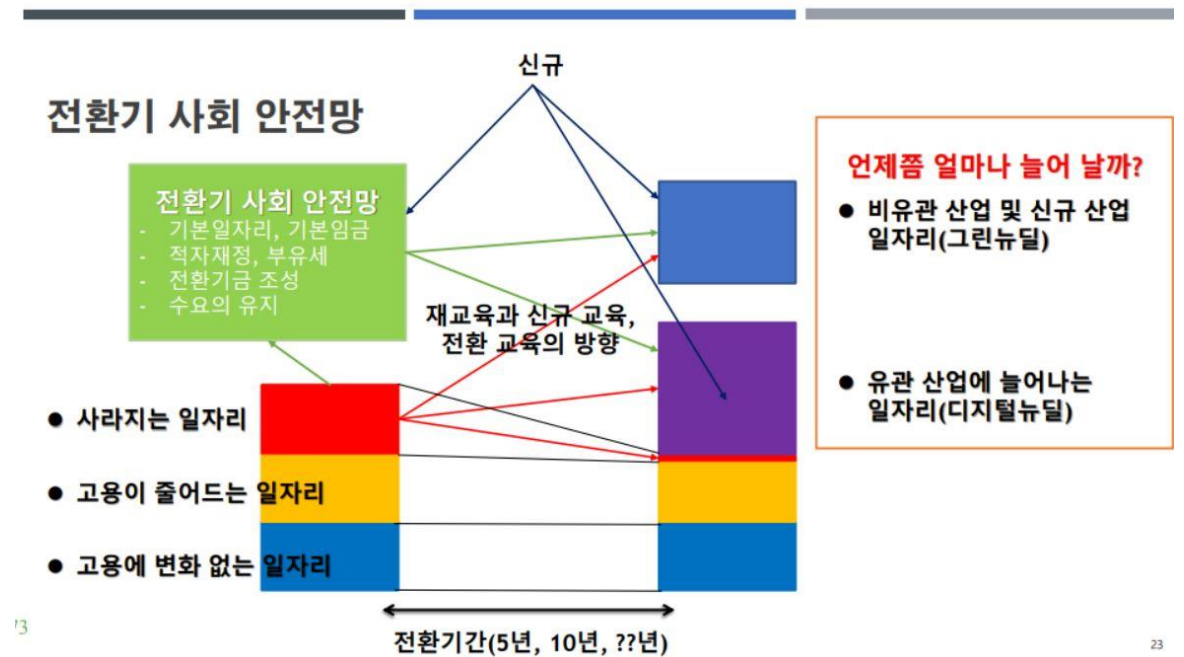
## ② 산업-사회-노동-지역 전환 통합 접근

탄소감축-산업전환-노동전환 연계해 협력 방안 도출  
: 급격한 전환기에서 산업과 노동정책으로만 접근한다고 될 것인가? **전환기 사회 안전망**

[그림 16] 탄소중립과 산업·노동전환을 둘러싼 이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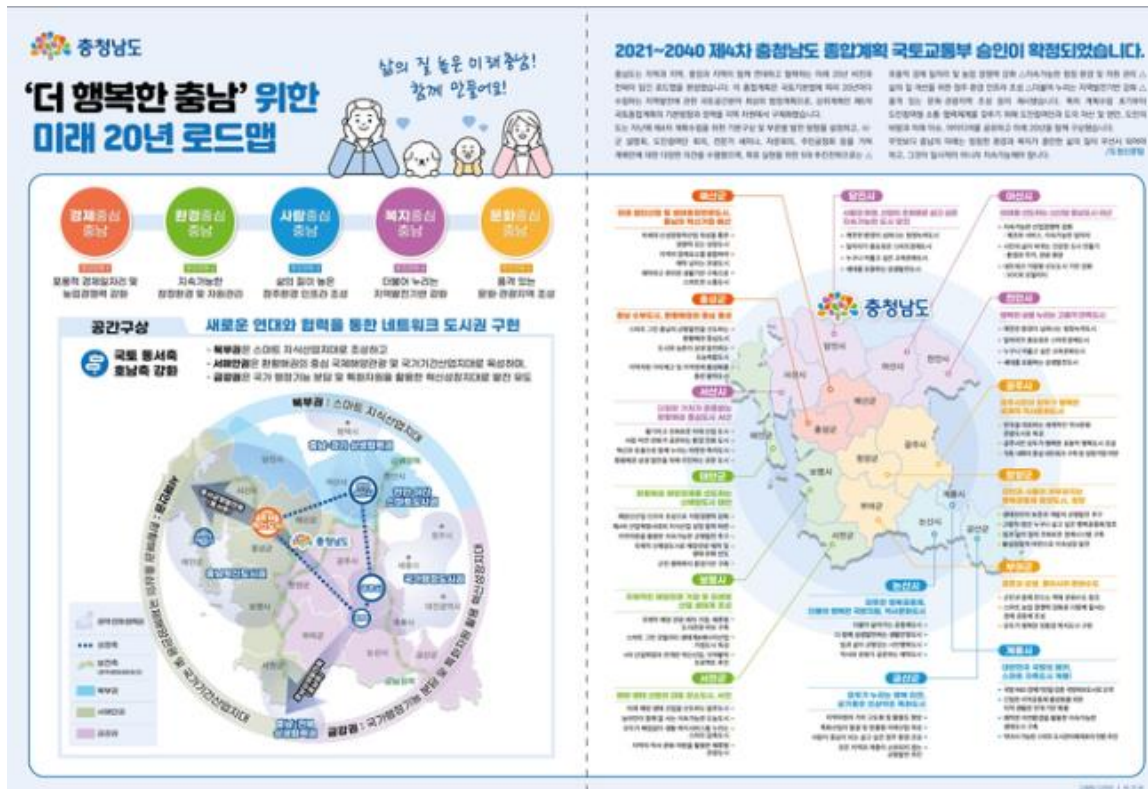
출처: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노동 전환의 주요 정책 과제  
-「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 연구회」결과 보고서 2022.2.22. 47쪽



출처: 이성희(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 기후위기와 기술발전 따른 정의로운 산업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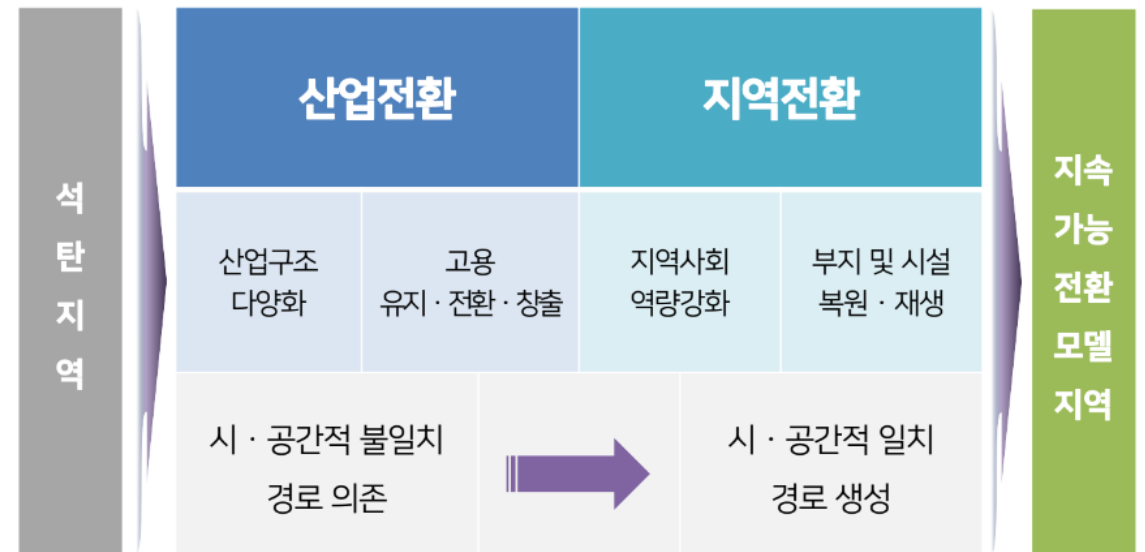
## ② 산업-사회-노동-지역 전환 통합 접근

### 제 4차 충남종합계획 - 충남지역에너지계획 - 충남탄소중립계획 - 정의로운전환계획 연계와 통합



### 충남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안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전환'을 위한 '투자'



출처: 여형범, 충남의 정의로운전환 정책 제안

2021 정의로운 전환 2차 포럼 발표자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ZUUgLaFtpPZYYSBTF8eTzh6\\_AQXoHnJL](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ZUUgLaFtpPZYYSBTF8eTzh6_AQXoHnJL)

## ② 산업-사회-노동-지역 전환 통합 접근

###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 제언

〈 충남 정의로운 전환의 5대 전략 〉

전략		주요 내용
전략 1	산업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산업(에너지, 환경, 해양 등) 육성</li> <li>◦ 지역경제의 산업전환 역량 구축</li> </ul>
전략 2	노동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산업부문 노동자를 위한 지원</li> <li>◦ 새로운 산업부문 노동자를 위한 육성</li> </ul>
전략 3	지역사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지역 및 영항지역의 쇠퇴에 대한 대책</li> <li>◦ 지역사회의 지역전환 역량 구축</li> </ul>
전략 4	복원 및 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대책 강화</li> <li>◦ 폐부지 및 폐시설에 대한 깨끗하고 안전한 복원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재생</li> </ul>
전략 5	추진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및 계획 직접 참여(위원회 등)</li> <li>◦ 장기적인 전환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법, 예산)과 전담조직 필요</li> </ul>

출처: 여형범,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제언

2021 정의로운 전환 2차 포럼 발표자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ZUUGLafTpPZyYSBTF8eTzh6\\_AQXoHnJL](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ZUUGLafTpPZyYSBTF8eTzh6_AQXoHnJL)

-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 및 그린뉴딜 계획에서 **정의로운 전환 추진 원칙의 구체화**
- 정의로운 **전환 자원/기금** 마련
- (가칭)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정의로운 전환 전담기관 및 플랫폼 구성
- 국가 및 지역의 **정의로운 전략 및 계획 수립**
- 지역 내 정의로운 전환 역량 증진 지원
- 에너지(석탄발전 산업) 분야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
- **산업전환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 수립 의무화**

## ② 산업-사회-노동-지역 전환 통합 접근

### 유럽 집행위원회의 지역별 정의로운 전환 계획 작성 요구 사항

- 국가 수준의 전환 단계에 대한 로드맵
- 전환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 지역이 직면한 문제 평가(일자리 상실, 지역발전 목표와 수요 등)
-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만들어내는 기여방안에 대한 설명
- 국가 수준의 전환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기금 지원의 일치성 평가
- 계획의 실행,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설명
- 기금 운영 방안 설명
- 중소기업 외 지원에 포함시키려는 기업이 있을 경우, 포함시켜야 할 기업의 목록과 지원 근거 제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정 활동에 투자하는 경우, 이 투자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 제시
- 제시된 계획과 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및 관련 프로그램의 시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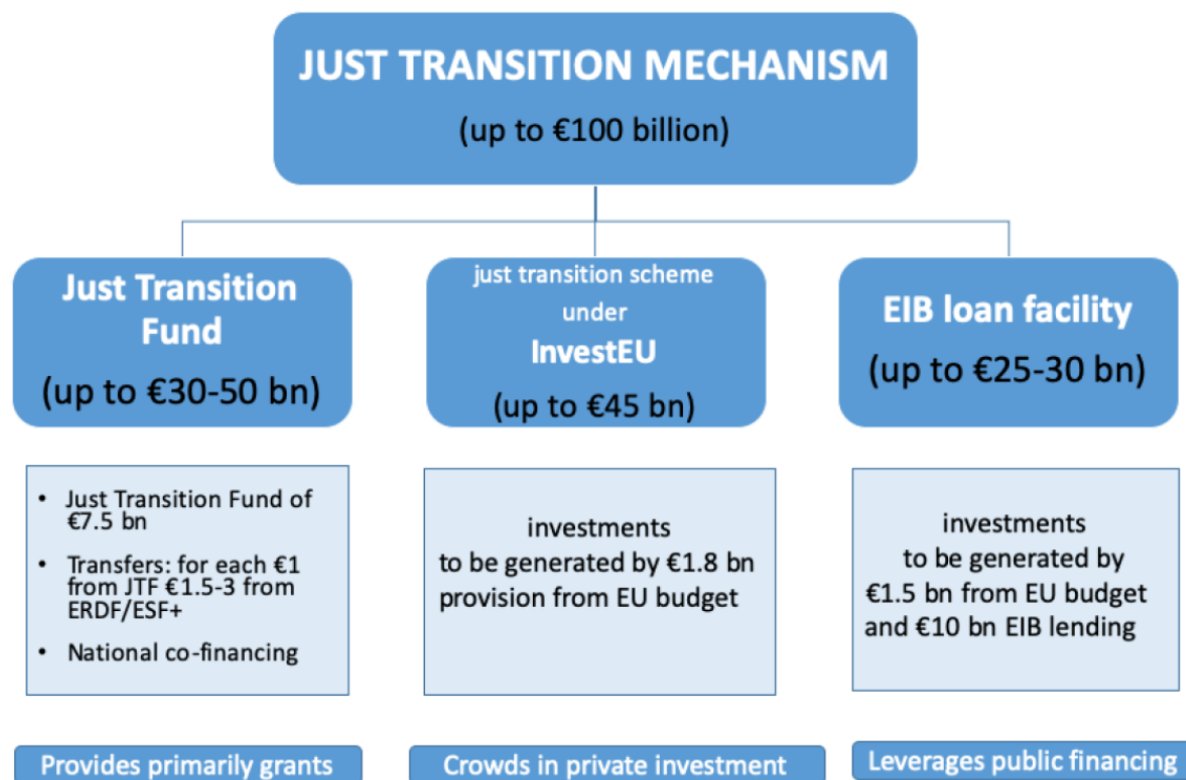
###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관련 신청서 제출 내용

-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행정구역
  2.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
  3.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4.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 ③ 정의로운 전환 기금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자원 마련과 사용 필요 : EU와 같이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



Data source: [European Commission](https://ec.europa.eu/economy_finance/), 2020.

유럽 집행위원회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은 2030년까지 1천억 유로를 석탄지역에 지원하는데, 지역별 기준(탄소집약도, 석탄광산 고용자 수, 산업 고용자 수 등)에 따라서 국가별 최소 6유로/인 금액에서 최대 20억 유로에 이르기까지 지원. 폴란드처럼 석탄 광산이 주요 산업인 지역이 더 많은 지원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기후대응기금'.  
2022년 2조 4,594억원 중 '공정한 전환' 사업에 1,836억원(전체 기금의 7.5%)

- 환경부 소관 507억원 △지역 공정 전환(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탄소중립 그린도시), △적응 및 인식제고(환경교육강화,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080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
-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159억원 △노동전환지원인프라(노동전환분석센터, 노동전환지원센터),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전체 기금의 0.6%)

### ③ 정의로운 전환 기금

#### EU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용 원칙

##### EU 정의로운 전환 기금

###### 지역별 기준에 따라 할당액 산정

구분	가중치 비중
지역별 탄소 집약도(NUTS 지역 수준)	45.00%
석탄 광산 고용자 수	25.00%
산업 고용	25.00%
연료용 토탄 생산	0.95%
오일 셰일 생산	0.95%



- 특정 국가는 최대 20억 유로까지만 할당, 이를 넘을 경우 다른 회원국에 배정
- 모든 회원국들에게 모든 인구 기준 최소 6유로/인에 해당하는 금액 배정

###### 3개 분야 11개 유형의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음 (기술적 지원을 공통 사항)

분야	11개 활동 유형
경제 재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다각화 및 전환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에 대한 투자</li> <li>창업 지원을 통한 신규 기업 육성 지원</li> <li>연구·개발 활동 및 선진 기술 이전 촉진 지원</li> <li>수용가능한 청정 에너지 기술 및 기반시설 배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li> <li>디지털화와 디지털 연계에 대한 투자</li> <li>순환경제 증진에 대한 투자(폐기물 발생 억제, 감량, 자원효율성, 재사용, 재수리, 재활용)</li> </ul>
사회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자의 기술력 증진 및 재숙련 교육</li> <li>구직자의 신규 일자리 탐색 지원</li> <li>구직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교육, 사회서비스, 복지 등)</li> </ul>
토지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부지의 오염정화, 토지 복원, 활용에 대한 투자</li> </ul>
공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적 지원</li> </ul>

-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활동 명시 : 원전의 건설이나 해체, 담배 관련 산업, 부실 기업 인수, 화석 연료 관련 투자(생산, 분배, 저장), 기존 통신망이 있는 지역에 대한 중복 사업,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지원

출처: 여형범 시민대토론회 2일차 | 탄소중립으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대책 발표문



### ③ 정의로운 전환 기금

오형나 교수 [그린뉴딜 관련 산업의 공정한 전환방안 마련] 연구 : EU 할당방식 적용 지역별 정의로운전환기금 할당

#### EU JTM 운용체계가 주는 시사점

##### ■ 원칙 기반 지원체계 (Rule-based)

-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정전환 사업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
- 유럽 분류체계(EU Taxonomy)를 녹색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사업범위, 가이드라인, 예제, 평가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
- 공정전환 포털 → 지원사업의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

##### ■ 수요기반 지원규모 산정과 주기적 업데이트

- 계층별, 직군별, 회원국별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공정전환 지원수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식을 업데이트

##### ■ 지역의 공정전환 역량 개선을 위한 장치

- 3개의 Pillars 중 핵심적인 공정 전환기금(JTF)의 경우 회원국의 자체적인 '공정 전환 계획'이 제출되고 승인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역내 이해당사자의 합의나 역내 자원 참여가 명시된 프로젝트에 대한 가점 부여
- EU 집행위 차원에서 '공정전환 플랫폼'을 통해 회원국이 자체적인 '공정전환 계획'의 수립을 포함한 기금지원 전과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 EU 방식을 적용한 경우

시도구분	본 연구 방식		EU 방식		
	시나리오 2	시나리오4	경제기준	사회적 기준	할당비율
서울특별시	7.68%	10.85%	8.84%	0.00%	6.19%
부산광역시	4.51%	3.25%	3.96%	0.00%	2.77%
대구광역시	2.54%	1.28%	2.20%	1.79%	2.08%
인천광역시	10.50%	8.16%	9.51%	0.00%	6.66%
광주광역시	0.91%	0.39%	0.53%	0.00%	0.37%
대전광역시	1.04%	0.33%	1.07%	0.00%	0.75%
울산광역시	3.16%	2.54%	5.11%	0.00%	3.58%
세종시	0.08%	0.05%	0.99%	0.00%	0.69%
경기도	11.55%	8.99%	6.45%	4.73%	5.93%
강원도	6.57%	6.45%	5.59%	16.45%	8.85%
충청북도	7.12%	7.00%	2.53%	6.48%	3.71%
충청남도	7.91%	11.42%	16.60%	9.29%	14.41%
전라북도	5.67%	4.93%	4.60%	11.08%	6.54%
전라남도	10.40%	9.94%	8.57%	18.93%	11.68%
경상북도	11.96%	15.72%	12.12%	19.06%	14.20%
경상남도	7.73%	8.39%	9.84%	11.86%	10.44%
제주특별자치도	0.65%	0.31%	1.50%	0.33%	1.15%

유럽연합(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TM)'을 활용해 예산이 지역별로 얼마나 할당돼야 하는지 분석. **탄소집약도, 고비용 전환업종 종사자수 등 경제적 기준, 지역 낙후도 등 사회적 기준을 고려해 지역별 자원 할당 비율을 도출.** 시나리오 2를 기준으로 지역별 배분을 계산한 결과 **경상북도 1조6385억원(전체의 11.6%), 경기도 1조5830억원(11.55%), 인천광역시 1조4392억원(10.5%), 전라남도 1조4263억원(10.40%), 충청남도 1조840억원(7.91%)** 순으로 자원 할당 출처: 오형나, 그린뉴딜 관련 산업의 공정한 전환방안 마련

## 소결 :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대화와 실행기반 마련

-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체계 수립
- 산업-사회-노동-지역 전환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고용영향 평가와 중·장기 대책 : 정의로운전환 기본계획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구 반영
-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과 운영방안 마련
-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확장
- 정의로운 전환 동맹-네트워크-연구 조직화



#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의 현주소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노동자와 대화합시다 -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이태성





## 질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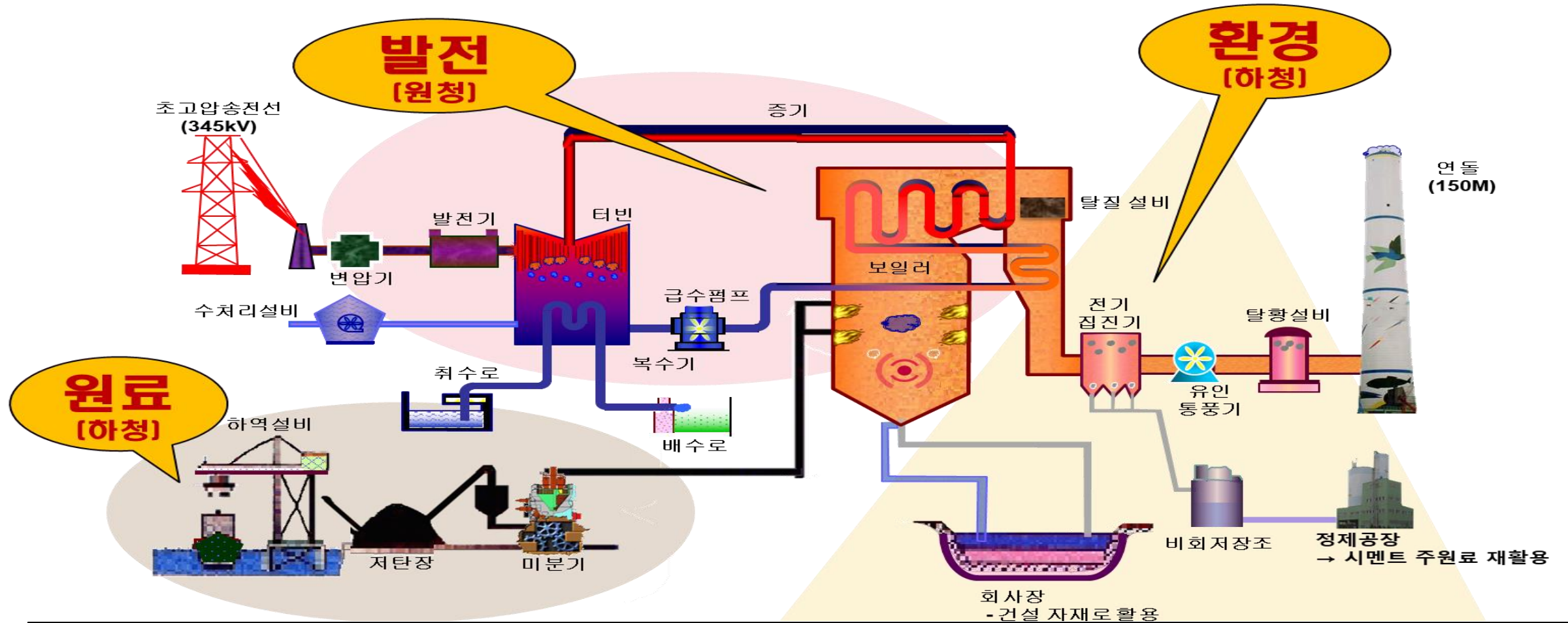
**노동자는 발전소에서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가?**

**- 석탄 화력발전소의 노동환경 이해와 현황-**





# 석탄화력발전소 계통도



**발전사 정규직 : 13,846명 원료/환경 운전-정비-자회사(청소,경비) 8,204명**





# 석탄화력발전소 인력현황(2022년 6월 기준)

[표 1] 발전소 비정규직 규모와 재배치 현황(2022.6.현재)

	업체 명	발전소 비정규직	석탄화력 비정규직 (2021.현재)	재배치	정년퇴직	계약해지	석탄화력 비정규직 (2022.현재)
경상정비	한전KPS <sup>1)</sup>	2,355	1,486	115	1	-	1,485
	1차하청	2,771	2,295	49	2	-	2,293
	2차하청	499	437	9	-	14	423
	(KPS하청)	320	308	-	-	38	270
연료운전	1차하청	2,575	2,474	119	2	2	2,470
자회사	5개 자회사	2,678	1,278	131	5	4	1,263
	합계(명)	11,198	8,278	423	10	58	8,204

\* 2021년 10월 기준, 발전소 비정규직 총원(류호정 의원실)을 기준(인원1)으로, 발전소 비정규직 총원 중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총원(인원2)을 산출하여, 보령, 울산, 호남 재배치 현황자료(2022.01. 류호정 의원실)를 보정하여 산출한 인원(현원)임.

\*\* 화력발전소 : 남동발전(삼천포, 영흥, 여수), 남부(하동, 삼척), 동서(당진, 동해), 중부(보령, 신보령, 제주, 신서천), 서부(태안), 남부(하동, 삼척), 남동(삼천포, 영흥, 여수)



#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이직, 전직 실태 현황

기 폐지 석탄화력 8기 인력 1,407명 중, 1,346명(95%) 재배치 완료, 39명 해고

연도	사업소	발전사		협력사	
		기존	폐지 후	기존	폐지 후
2017	서천 1,2	139명	전원 재배치	218명	197명 재배치 8명 정년 13명 감축
2017	영동 1,2	213명	전원 재배치	158명	148명 재배치 10명 감축
2020	보령 1,2	139명	전원 재배치	146명	124명 재배치 6명 정년 16명 감축
2020	삼천포 1,2	110명	전원 재배치	145명	137명 재배치 8명 정년
합계		601명	전원 재배치	667명	606명 재배치 22명 정년 39명 감축



# 동서발전의 노동자 재배치 현황 및 계획

사업소 (폐지일)	회사명		주요업무	현원	잔류	재배치	정년 퇴직	계약 해지
호남 (21.12.31)	한전산업개발		환경설비 운전위탁 경상정비	68	-	64	2	2 *
	한전KPS		경상정비	53	6	46	1	-
	케이티엠	경상정비		12	-	-	-	12 **
	합계			133	6	110	3	14
울산기력 (22. 1.31)	한전산업개발		환경설비 운전위탁	36	-	36	-	-
	한전KPS		경상정비	32	7	25	-	-
	아전이엔씨	경상정비		20	-	-	-	20 **
	합계			88	7	61	-	20
				221	13	171	3	34

\* 계약직 채용으로 계약기간만료되어 계약해지

\*\* 단기계약(계약기간: 21.1.1~12.31)으로  
계약종료일 도래하여 계약종료

해고  
14명

- 케이티엠: 14명 중 9명 여수지역  
기업재취업가능업체연결  
(최종입사여부는 확인곤란)

해고  
20명

- 아전이엔씨: 울산지역 재취업 희망자 대상 인근  
기업 취업자원 예정  
(발전소내 경상정비업체 구직현황 파악등)

281명 타지역으로 재배치



# 발전소 폐쇄 무대책이 고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를 죽였다!

##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 사망사건 개요

### 1. 개요

**가. 일시 : 21년 10월 15일(금) 08:55경**

**나. 장소 : 삼천포발전본부 회정제공장 전기팀 비품창고**

**다. 사망자 : 이00(38) / 경상정비 전기팀**

**라. 소속사 : 고 김용균 노동자 같은 소속의 한국발전기술**

**마. 원청사 : 한국남동발전**

**바. 입사일 : 15년 3월으로 아내와 어린 딸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 옴**

**사. 사고시 상황**

- 1) 10.14(목) 17:32분경 퇴근(지문인식기)
- 2) 17:52분경, 정문통과(출)
- 3) 17:58분경, 정문통과(입)
- 4) 10.15(금) 08:33분경, 회정제공장 앞 주차장에서 고인 차량 발견
- 5) 08:55분경, 회정제공장 전기팀 비품창고에서 고인 발견
- 6) 08:57분경, 경찰신고
- 7) 09:10분경, 경찰 및 가족 현장도착 및 유서발견
- 9) 09:18분경, 119구급대 도착
- 8) 09:21분경, 사망확인후 경찰인계



- 폐쇄현실 속에서 아내와 어린 딸을 둔 고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과 함께 공기업 이직 준비였음.
- 일과재취업을 병행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 발전소 폐쇄 정부정책의 전환 비정규직 개인 감당 힘든 현실
- 결국 고인은 이직을 중단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



# 당장 폐쇄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 전무한 상황(서부발전 태안)

## 1. 발전5사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소 폐쇄 시기

발전소명	설비용량	폐지시기	비고(대체전환계획)
태안 화력 #1	500MW	'25.12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LNG 복합 연료전환 반영
태안 화력 #2	500MW	'25.12	
태안 화력 #3	500MW	'28.12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LNG 복합 연료전환 반영
태안 화력 #4	500MW	'29.12	
태안 화력 #5	500MW	'32.12	
태안 화력 #6	500MW	'32.12	

구분	업체명	총원	설계인원/ 실제예상 감소인원	비고(전환계획)
발전사 정규직	서부발전	422명 태안이주	422 / 0	·김포열병합 태안1~6호기 대체복합 건설, 신재생 사업 등 타 사업 재배치 등에 따라 예상 감소 인원 전원 전환 (실제예상 감소인원 0명)
자회사	코웨이서비스(주)	31	31 / 19	타호기 배치 예정
협력업체 (운전분야)	한전산업(1차)	154	134 / 154	재배치(공공기관 예정)
	영진(2차)	9	9 / 9	재배치(한전산업과 협의)
	한전KPS(1차)	68	83 / 65	재배치(공기업)
	KTM(2차)	13	13 / 13	재배치(한전KPS와 협의)
	OSI(2차)	7	7 / 7	재배치(한전KPS와 협의)
	금화PSC(1차)	169	167 / 169	재배치
	한전산업(1차)	66	50 / 56	재배치(공공기관 예정)
	신흥기공(1,2차)	7	7 / 7	재배치
	OES(1차)	10	10 / 10	재배치
	우진엔텍(1차)	14	13 / 14	재배치

4. 발전소 폐쇄에 따른 향후 자회사, 용역업체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계획(자회사)

- 자회사 예상유휴인력 12명은 태안발전 타호기 배치 예정

재배치,  
재취업  
분

작성자	발전운영처 발전운영실 신두영 (☎041-400-1536)
-----	------------------------------------

4. 발전소 폐쇄에 따른 향후 자회사, 용역업체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계획(용역업체)

### □ 신규 발전소(LNG 복합),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의 고용전환 지원

- (서부발전 추진사항)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력전환 협업모델 구축
  - 석탄화력 폐쇄대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무전환 단계적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 재배치, 신규설비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양성인력 투입방안 등 단계적 절차 확보

① 안정적 재배치	② 전문인력 양성	③ 양성인력 투입
고용안정 확보, 교육기회 보장	공공기관·민간기업 훈련 지원체계 구축	신규설비 경상정비 참여기회 제공

※ 서부발전은 석탄화력 운영·정비인력의 직무전환을 위한 협업모델 구축 중

- 서부발전-한국발전인재개발원-한전산업개발과 업무협약 체결('21.9.16)

서부발전	인재개발원	민간정비사
전문교육 예산지원	+	핵심설비 전문교육
		+
		인력육성계획 수립

□ 석탄화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직무전환 지원, 신규사업 참여 방안 등 추가 검토 추진 예정. 끝.

고용  
위기  
970명





# 당장 폐쇄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 전무한 상황(중부발전 보령)

## 1. 발전5사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소 폐쇄 시기

발전소명	설비용량	폐지시기	비고(대체전환계획)
보령화력 5호기	500MW	’25.12	LNG대체전환
보령화력 6호기	500MW	’25.12	LNG대체전환

## 2. 발전사, 자회사, 용역업체(운전,정비-1,2,3차하도급포함)별 총원, 폐쇄시기별 실제 예상인원 및 설계상 인원

구분	업체명	총원	설계인원/ 실제예상 감소인원	비고(전환계획)
발전사 정규직	한국중부발전 (보령 #5,6)	134명	134명 / 3명(정년퇴직)	신재생·LNG 등 신규사업 총원(94명), 타사업소 이동(30명), 폐지 후속업무(7명)
자회사	중부발전 서비스	9명(청소)	9명(청소) / 0명	재배치(대체건설)
협력업체 (운전분야)	한전산업 개발	75명	75명 / 0명	재배치(공기업 예정)
협력업체 (정비분야) 1,2,3차 포함	한전KPS	70명	70명 / 0명	재배치(공기업)
	오에스 산업개발	15명	15명 / 0명	한전KPS와 하도급사간 정규직 전환 협의 중
	청림건설	6명	6명 / 0명	한전KPS와 하도급사간 정규직 전환 협의 중
	한전산업 개발	12명	12명 / 0명	재배치(공기업 예정)
	수산인더 스트리	15명	15명 / 0명	재배치(중견기업)
	신한전설	3명	3명 / 3명	미정(지역기업)
	동양전기 이엔지	3명	3명 / 3명	미정(지역기업)
합계		342명	342명 / 9명	

고용위기  
342명

## 3. 폐쇄 발전소(보령) 인력 재배치, 감축현황

구분	업체명	기존인원	폐지 후 전환(재배치, 잔류, 계약만료 등)
발전사 정규직	한국중부발전 (보령 #1,2)	139명	신재생·LNG 등 신규사업 총원(79명), 폐지 후속업무(39명), 타사업소 이동(21명)
자회사	중부발전 서비스	10명(청소)	재배치(3명), 잔류(3명), 정년퇴직(4명)
협력업체 (운전분야)	한전산업 개발	19명	재배치(19명)
	한전KPS	37명	재배치(37명)
	OES	19명	재배치(17명), 정년퇴직(2명)
	한전산업 개발	18명	재배치(18명)
	수산인더 스트리	14명	재배치(14명)
	신흥기공	16명	재배치(2명), 계약만료(14명)
	신한전설	3명	재배치(3명)
협력업체 (정비분야) 1,2,3차 포함	동양전기 이엔지	4명	재배치(4명)
	동양전기 이엔지	6명	재취업(4명), 계약만료(2명)
합계		285명	재배치(260명), 잔류(3명), 계약만료(22명)

재배치,  
재취업  
분

## 4. 발전소 폐쇄에 따른 향후 자회사, 용역업체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계획

- 보령 5, 6호기 폐지 시 보령, 함안 LNG 발전소 대체 건설에 따라 인력 재배치 예정
- 발전소 폐쇄에 따른 자회사, 용역업체 유휴인력 해소를 위해 재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주요 협력사 간담회를 통한 보령 5, 6호기 근무경력자 우대 협조 요청 등 추진





# 당장 폐쇄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 전무한 상황(동서발전 당진)

## 1. 발전5사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소 폐쇄 시기

작성자 : 에너지전환처 전원개발부장 한중욱(070-5000-1710)

발전소명	설비용량	폐지시기	비교(대체전환계획)
당진발전본부#1,2	500MW×2	2029.12	기존 호남발전 부지 내 LNG복합 건설
당진발전본부#3,4	500MW×2	2030.09	기존 울산발전 부지 내 LNG복합 건설

## 2. 발전사, 자회사, 용역업체(운전,정비-1,2,3차하도급포함)별 총원, 폐쇄시기별 실제 예상인원 및 설계상 인원

(발전사) 작성자 : 기획처 경영기획실 차장 제환선(070-5000-1118)  
(자회사) 작성자 : 사회적가치추진실 혁신일자리부 유동윤 주임(070-5000-1176)  
(협력업체) 작성자 : 발전운영실 차장 박상원(070-5000-1527)

(단위 : 명)

구분	업체명	총원	설계인원/ 실제예상 감소인원	비고(전환계획)
발전사 정규직	한국동서발전(주) 당진 # 1,2,3,4	206	219/0	LNG복합, 신재생사업 등 재배치예정
자회사	EWP서비스(주)	13	13/7	- 자연감소 : 7명 - 인력 재배치 : 6명
협력업체 (운전분야)	한전산업개발	124	124/0	타사업소 전환
	동우실업(1차)	10	10/10	계약종료(1년씩 계약)
	한전KPS	58	-/0	타사업소 전환
	삼신	8	-/0	타사업소 전환
	금화PSC	37	-/0	타사업소 전환
	한전산업개발	34	-/0	타사업소 전환
	수산ENS	26	-/0	타사업소 전환
	대명(1차)	15	-/15	계약종료(1년씩 계약)
	마스터텍(1차)	12	-/12	계약종료(1년씩 계약)
	한전(1차)	16	-/16	계약종료(1년씩 계약)
		559		

고용  
위기  
559명

## □ 사업소별 협력사 폐지인원 현황

○ 운전분야 용역계약으로 설계인원 산정이 가능, 정비분야 공사계약 설계인원 산정불가

## 4. 발전소 폐쇄에 따른 향후 자회사, 용역업체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계획

작성자 : 기획처 경영기획실 차장 제환선(070-5000-1118)

□ 고용노동부 발표(21.7.23)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프로그램 자회사·용역업체에 적극안내

가. (노동전환) 재직자 역량강화·직무전환, 전직·재취업 준비지원 등

나. (사업전환)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재편·전환 지원

다. (지역전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고용 위기대응 지원 등



# 당장 폐쇄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 전무한 상황(남부발전 하동)

## 1. 발전5사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소 폐쇄 시기

발전소명	호 기	설비용량 (MW)	폐지시기*	비 고(대체전환계획)
하동빛드림본부	1	500	'26.06	LNG 대체건설
	2	500	'27.06	
	3	500	'28.06	
	4	500	'28.12	
	5	500	'31.06	
	6	500	'31.12	

\*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2.28)에 따라 폐지 확정

## 2. 발전사, 자회사, 용역업체(운전, 정비-1,2,3차하도급포함)별 총원, 폐쇄시기별 실재상인원 및 설계상 인원

구 분	업체명	총 원	설계인원/ 예상 감소인원*	비 고(전환계획)
발전사 정규직	한국남부발전(주)	2,614	2,697/0	LNG, 신재생사업 등에 재배치 예정
자회사	KOSPO서비스(주)	30명 <sup>1)</sup>	30명 / 20명 <sup>2)</sup>	인력 재배치 10명에 대한 대책 필요
협력업체 (운전분야)	한전산업개발	273	273 / -	재배치 예정(공기업화 진행중)
협력업체 (정비분야) 1,2,3차 포함	한전KPS	76	76 / -	대체건설 전환배치(예정)
	한기발전	19	19 / -	
	구평전력	7	7 / -	
	일진파워	151	151 / -	재배치 예정(공기업화 진행중)
	HPS	101	101 / -	
	한전산업개발	103	103 / -	
	오르비스	30	30 / -	
	수산ENS	24	24 / -	전환배치(예정)
	업체 총계	814	804	

지역주민  
청소업무  
해고

고용위기  
804명

1) 하동 화력 공통인원 제외 (경비, 시설관리, 소방)

2) '21~'31년까지 정년퇴직 예정인원



# 당장 폐쇄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 전무한 상황(남동발전 삼천포)

## 2. 발전사, 자회사, 용역업체(운전,정비-1,2,3차하도급포함)별 총원, 폐쇄시기별 실제 예상인원 및 설계상 인원

구분	업체명	총 원	설계인원/ 실제예상 감소인원	비고(전환계획)
발전사 정규직	한국남동발전(주)	<input type="checkbox"/> 삼천포 #3.4 - 191 <input type="checkbox"/> 삼천포 #3.4 - 122 <input type="checkbox"/> 영흥 #1.2 - 164	<input type="checkbox"/> 삼천포 #3.4 - 188/0 <input type="checkbox"/> 삼천포 #5.6 - 136/0 <input type="checkbox"/> 영흥 #1.2 - 174/0	<input type="checkbox"/> 삼천포 #3.4 - #3.4 대체 LNG 발전운영 인력, 왕숙집단에너지 운영인력 등 재배치 전환 <input type="checkbox"/> 삼천포 #5.6 - #5.6 대체 LNG 발전운영 인력 등 재배치 전환 <input type="checkbox"/> 영흥 #1.2 - 영흥 #1.2 LNG 발전운영 인력 등 재배치 전환
자회사	(주)코엔서비스	28명*	12명/16명	사업소내 재배치
협력업체 (운전분야)	한전산업개발	343	343 / -	대체건설 전환배치
	한산기전	40	40 / 40	하도급 계약종료
	한전KPS	291	291 / -	대체건설 전환배치
	KEPS	221	221 / -	대체건설 전환배치
	수산인더스트리	179	179 / -	대체건설 전환배치
	금화 PSC	177	177 / -	대체건설 전환배치
	KMC	57	57 / -	대체건설 전환배치
	우진엔텍	48	48 / -	대체건설 전환배치
	OES	41	41 / -	대체건설 전환배치
	HPS	36	36 / -	대체건설 전환배치
	세방	33	33 / -	대체건설 전환배치
	용신건설	32	32 / 32	하도급 계약종료
	수산ENS	30	30 / -	대체건설 전환배치
	대한통운	29	29 / -	대체건설 전환배치
	하늘기업	21	21 / 21	하도급 계약종료
	합동전기	17	17 / 17	하도급 계약종료
	쌍용로지스틱스	15	15 / -	대체건설 전환배치
	중앙엔지니어링	15	15 / 15	하도급 계약종료
	화신전력	12	12 / 12	하도급 계약종료
	세덕기전	12	12 / 12	하도급 계약종료
	케이티엠	12	12 / 12	하도급 계약종료
	신흥기공	10	10 / -	대체건설 전환배치
	수산 ENS	10	10 / -	대체건설 전환배치
	동림산업	7	7 / -	대체건설 전환배치
	삼원전력	6	6 / -	대체건설 전환배치
	한전 KDN	3	3 / -	대체건설 전환배치
	동양전기	2	2 / 2	하도급 계약종료
합계		1,727	계약해지 179명	

해고  
179명  
예정



## 질문 2.

**에너지전환 동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환에 사각지대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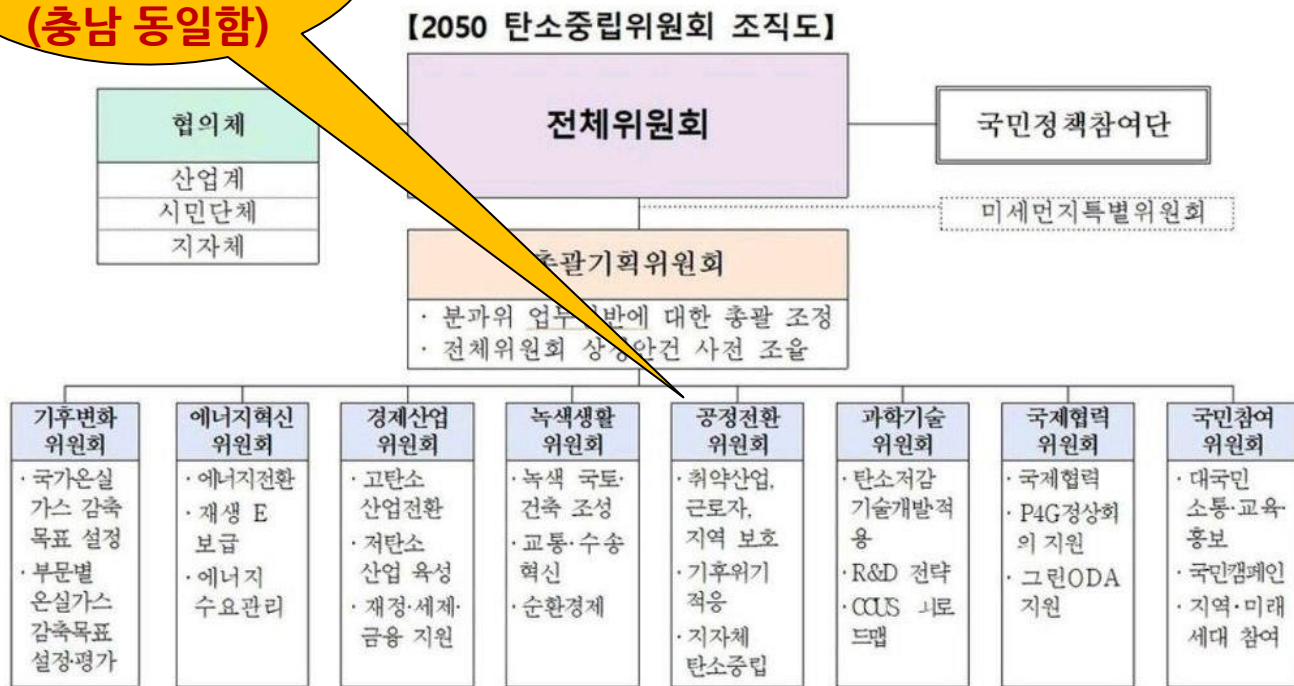
**-소유와 운영, 원청과 하청의 한계-**



#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 정의로운 전환 논의 구조

문재인정부  
탄중위  
노동자 배제  
(충남 동일함)



### ✓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

-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
- 실현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2030년 원전 발전비중 상향**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원전의 계속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

- **재생e는 보급 지속 추진**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e 산업생태계 고려

**석탄·LNG 발전은 합리적으로 감축**  
재생e 보급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

윤석열정부 에너지정책방향 공청회 22.06.21 자료





#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에너지 정책 방향

## 윤석열 대통령 에너지 공약

<b>탄소중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0년 탄소중립 공감</li> </ul>
<b>원자력 발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계 의견, 사회적 합의 필요</li> </ul>
<b>재생에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 발전 비중 30% 유지</li> <li>• 신한울 건설 재개</li> <li>• 원자력 발전 통한 탄소 중립</li> <li>•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현실적 목표로</li> </ul>

국민의힘

그래픽 박혜수기자 hspark@newsway.co.kr Newsway

### ③ [석탄LNG] 석탄발전은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에너지도 활용

#### ① (석탄발전) 전력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하여 합리적 감축 유도

노후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전력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

임기중 화력(석탄+LNG) 발전  
비중 40%대로 감축 /  
노동대책은 전무함



#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에너지 정책 방향

## ☑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추진
-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혁신 유도체계 강화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등 고려하여 감축 시나리오 점검
-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
- 전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 전력시장 다원화, 경쟁기반 전력시장 강화  
기저전원·저탄소전원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 일자리와 지역경제 고려한 석탄발전 감축추진  
보상원칙 하,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감축 유도

② (전력 新산업)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전망·성공 가능성·경제적효과가 우수한 핵심 전력 新산업\* 지속 발굴

\* [예] VPP, 차세대 ESS(장주기 ESS, 사용후 배터리),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섹터커플링 등

- 시장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기술개발, 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 '20년 대비 '30년 목표 : (기업수) 2,500개 → 5,000개, (일자리) 3만개 → 10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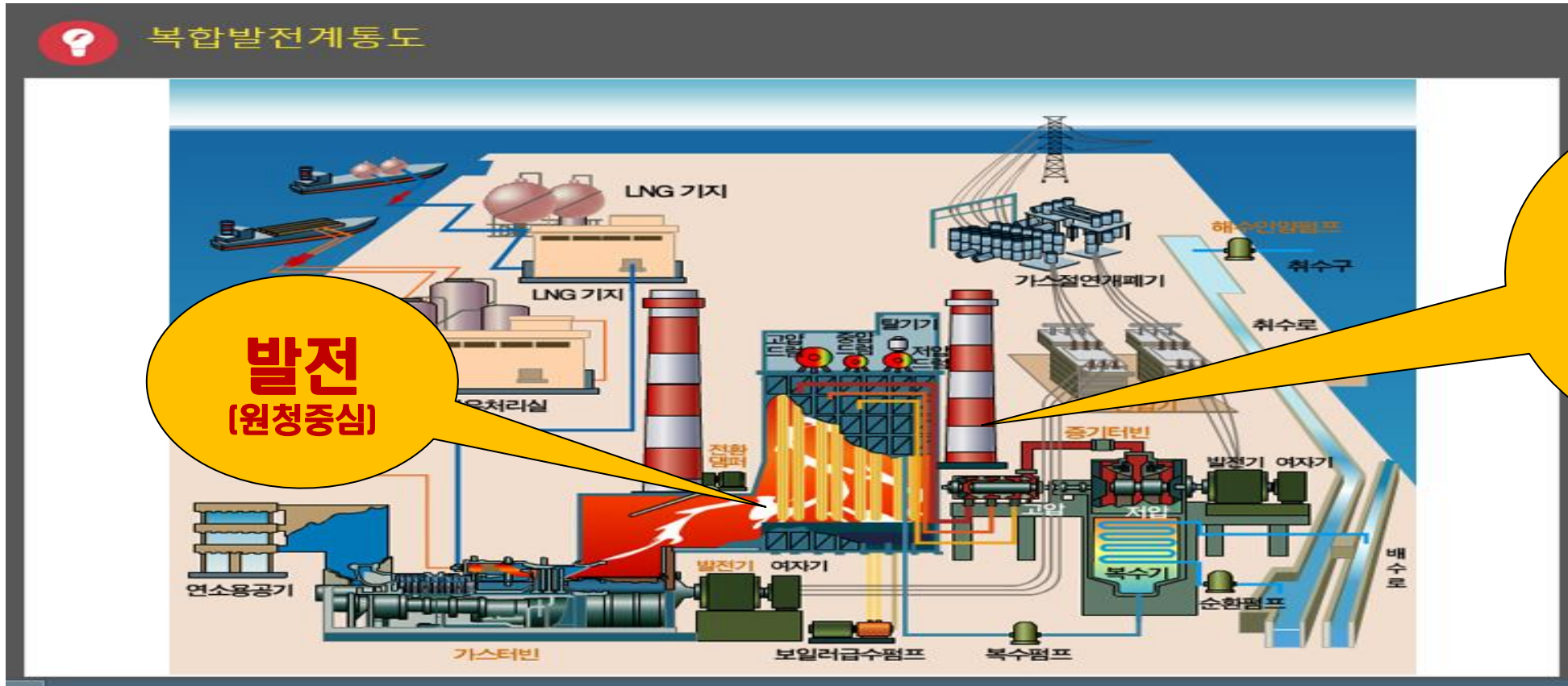
# 노후 석탄화력 대체 LNG발전소 건설 시나리오

2024	삼천포#3·4(1,120)	24. 12	폐쇄와 건설 시기 불일치 고용불안, 지역붕괴 불가피	LNG연료전환 26.10 준공예정 (삼천포)
2025	보령#5·6 (1,000)	25. 12		LNG연료전환 (보령, 합안)
	태안#1·2 (1,000)	25. 12		LNG연료전환 (공주, 여수)
2026	하동#1(500)	26. 06		LNG연료전환 (하동)
2027	하동#2 (500)	27. 07	충남의 경우 대부분 타 지역 이주건설 예정임	LNG연료전환 (하동)
	삼천포#5(500)	27. 07		LNG연료전환 (삼천포)
2028	삼천포#6	28.01		LNG연료전환 미정
	태안#3	28.12		LNG연료전환 (여수)
	하동#3·4(2,000)	28.06/12		LNG연료전환 (안동, 합천)
	서인천복합#1~8 (1,800)	28년 LNG 도 폐쇄		-
2029	태안#4(500)	29.12	충남의 경우 대부분 타 지역 이주건설 예정임	LNG연료전환 미정
	당진#1·2(1,000)	29.12		LNG연료전환 (호남)
2030	당진#3·4(1,000)	30.09		LNG연료전환 (울산)
2031	하동#5·6(1,000)	31.06/12		LNG연료전환 (하동)
2032	태안#5·6(1,000)	32.12	충남의 경우 대부분 타 지역 이주건설 예정임	LNG연료전환 미정
2034	영흥#1·2(1,600)	34. 09/12		LNG연료전환 미정
합계	15,340 (30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12.28.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 에너지전환 가교역할 LNG 발전소- 하청노동자는 없다!



석탄이송,  
환경설비  
인력 불필요  
(하청구조)

- 선고용-후교육으로 고용보장 정책 필요, 지역붕괴 일자리 대안 마련
- 폐쇄지역 LNG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회적 노력 필요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1,2폐쇄부지 LNG 발전소 건설 사례 참조)





# 실증된 “공정과 상식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공정전환” 방안

3대 방안	내용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 마련 · 맞춤형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실현되도록 단계별 지원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전국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 · 시민사회, 산업계, 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기업 지원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공정전환 추진
- 노동자 대상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이라는 기존의 구조조정 대책의 반복에 그침
- 약속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마저 불이행 중





# 산업부의 탈석탄 정책 방향

## • 시장과 기업에 맡겨진 에너지 전환

### ◇ 법·제도를 통해 석탄발전의 폐지 및 전환 촉진

#### □ 석탄발전상한제 등 시장 원리를 통해 석탄발전 폐지를 유도

- 발전공기업 5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발적 석탄상한제\*를 민간 발전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제도화 추진

\*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민간 포함 석탄발전량 제한 근거조항 마련(산중위 계류중)

-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LNG발전을 반영하여 신속 전환 유인

\* 최대 '35년까지만 LNG발전 인정→잔존 석탄발전('34년말 37기)의 조기 전환 유도

#### □ 석탄발전 조기 폐지·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와 비용보전 방안마련

\*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

\*\* 사업자 협의를 바탕으로 폐지 및 비용보전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지원법 산중위 계류 중

자료: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  
(2021.12.28. 산업통상자원부)

### 기본 방향

- 전력수급 안정을 확보하면서 석탄발전의 청정e로의 전환 촉진
- 사업자, 협력사, 지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여 전환 추진
- 법·제도, 소통·협의 체계 마련

####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발전산업 변화 전망과 정책방향】

구분	현재	전환기	미래	정책방향
발전산업 전환	석탄발전	LNG발전	수소발전	전환 가속화
		암모니아발전		
		신재생, CCUS, ESS		
부지 활용 (지역 경제)	석탄발전소	LNG발전소	수소·암모니아, 신재생 발전소	사업자-지자체-지역주민 간 협의촉진
		자연복원, 문화·관광시설		
주요 일자리 변화	석탄발전설비 운전, 정비	LNG발전설비 운전, 정비	수소·암모니아 생산·도입·저장설비 운전, 정비 문화관광시설 운영	전환교육 및 구조조정
법·제도	에너지 전환 지원법 제정 : 석탄발전 조기 폐지·전환 및 비용보전 근거 마련 전기사업법 개정 : 석탄발전 상한제 근거 마련 에너지법 개정 : 지역 협의 기구 설치 근거 마련			



# 시능만 하는 노동자 전환 대책

고용 주체가 없음.  
개별 기업과 노동자  
에게 책임 전가.

지역 사회와 노동자에게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지우는 셈.

## ◇ 석탄발전 일자리도 친환경 발전 일자리로 전환

□ LNG·수소·암모니아 등 低탄소·無탄소 대체 발전소 및 신재생e 확대로  
성장이 예상되는 **송·배전 공사·정비 분야 등으로 최대한 재배치**

□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에 따른 신규 발생 일자리를 전망하고 교육·  
**자격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TF\*\* 운영('22.上~)**

\* 예 : LNG·수소·암모니아 터미널 및 저장탱크 운영·안전관리 업무, CCUS 설비 운전 등

\*\* 구성 : 발전사·협력사 노·사 및 발전인재개발원

□ 재배치·신생 업무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LNG발전 전환 맞춤형 교육사업, 송·배전 공사·정비 교육사업 등('22년 기획→'23년~)

\*\* 재원 : 정부+발전5사+석탄발전 협력사+노조(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고용부 직업훈련 연계 활용

## ◇ 노동자 불안 완화를 위한 상황공유 및 지역기반 대응체계 구축

□ 석탄발전 폐지 예정시점 기준 최소 1년 전부터 지자체·고용지청·  
발전사·협력사 간 **전환TF**를 구성하고, 폐지 준비 상황 및 계획 공유

○ 他지역으로 재배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 소규모 협력사는 지자체·  
고용지청 중심으로 지역 기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사례 : 호남#1,2 폐지에 앞서 '특별취업지원팀'(지방고용노동관서+지자체)을 구성  
하고, 인근 산단 소재 기업 등으로 재취업 알선 등을 지원

## ◇ 불가피하게 전환이 곤란한 일자리는 점진적 감축

□ 석탄발전에만 필요한 특수직종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년에 의한 점진적 감축 유도**





# 민간기업도 따라하는 비정규직 일자리 전환

LG전자 MC사업본부 직원 수

단위: 명



[자료=LG전자 사업보고서]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NEWSPIM

## LG전자 모바일 인력 어디로 이동하나

※ 총 3400명

구분	이동인원	예상업무
LG전자 MC 사업본부 잔류	500명	스마트폰 사후서비스(A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LG전자 H&A사업본부	2000명	생활가전 개발 등
LG전자 HE사업본부		TV 개발 등
LG전자 VS사업본부		자동차 전장(전자장비부품) 개발 등
LG전자 BS사업본부	600명	모니터·노트북 개발 등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 전지, 소형 전지 개발 등
LG유플러스	300명	5세대(5G), 증강현실(AR)서비스 개발 등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 등

The JoongAng

- 2021년 LG 전자 휴대폰 사업 종료 후 정규직 3,400 노동자 해고 없이 일자리 보장
- LG 전자 내 이직 및 그룹 내 신규 사업 배치 / LG 그룹 경영진 차원의 결정과 집행
- 하지만 하청 인 1,2,3차업체는 줄도산과 해고
- **에너지 산업의 총수격인 정부와 산업부의 문제!**



## 질문 3.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



우리는 에너지 산업전환 직면해 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대책

이제 노동자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



# 1.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하청노동자 연구용역 필요

- 👉 노동환경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평등과 배려'
- 👉 지역주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반드시 검토
- 👉 선고용-후교육 도입, 이주주거대책, 교육지원방안 검토

[표1] 발전사 사업장 인근 거주 분포 현황 (21년 4월 정의당, 공공운수노조 설문조사)

구분	발전소 인근 거주 분포	타 지역거주 분포	계
인원(명)	3,313	321	3,634
비중	91.2%	8.8%	100%

[표2] 가족구성원 비중

1인	2인	3인	4인 이상	무응답	합계
390	497	883	1,852	12	3,634
10.7%	13.7%	24.3%	51.0%	0.3%	100%

#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와 인구감소 심각

<표 6-73>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단위: 십억원)

지역	경제적 영향 1		경제적 영향 2	
	GRDP 규모 (2017)	생산유발 감소금액	GRDP 규모 (2017)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
충청남도	110,165	19,208	110,165	7,830
경상남도	106,561	17,564	106,561	7,518
인천광역시	85,791	2,832	85,791	1,140
전라남도	71,340	2,331	71,340	1,076

41조  
9천억

출처: KOSIS

<표 6-74>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단위: 명)

지역	경찰인구 (2019)	고용 영향	
		취업유발 감소인원	비중 (%)
충청남도	1,231,000	7,577	0.62%
경상남도	1,817,000	7,896	0.43%
인천광역시	1,653,000	1,543	0.09%
전라남도	999,000	631	0.06%

17,647명  
가족포함  
8~10만명

# 발전소 연관 노동자 와 상권에 집중된 피해

<표 6-75> 감소인원 카테고리별 분석

구분	감소인원(명)	비중	추정방법
발전소 직접근로자	2,132	21.1%	현황 자료
상권 근로자 (연관 소상공인)	3,100	17.6%	유발계수에 의한 추정
발전소 협력업체 및 연관업체 근로자	12,415	70.3%	발전소와 상권 감소인원 이외의 인원
합계	17,647	100%	

## -석탄화력발전 30기 폐쇄 - LNG발전 24기 전환 시 전환불가 추정인원

구분	석탄화력(30기)	LNG발전(24기)	전환불가인원
발전본부	2,625	1,404	1,221
협력업체	5,310	1,620	3,690
합계	7,935	3,024	4,911

# 에너지전환 노동자 심각성 인식

## II. 조사결과 :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 발전 비정규노동자 **61.2%**가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인식. 심각성 인식 수준 **7.05 / 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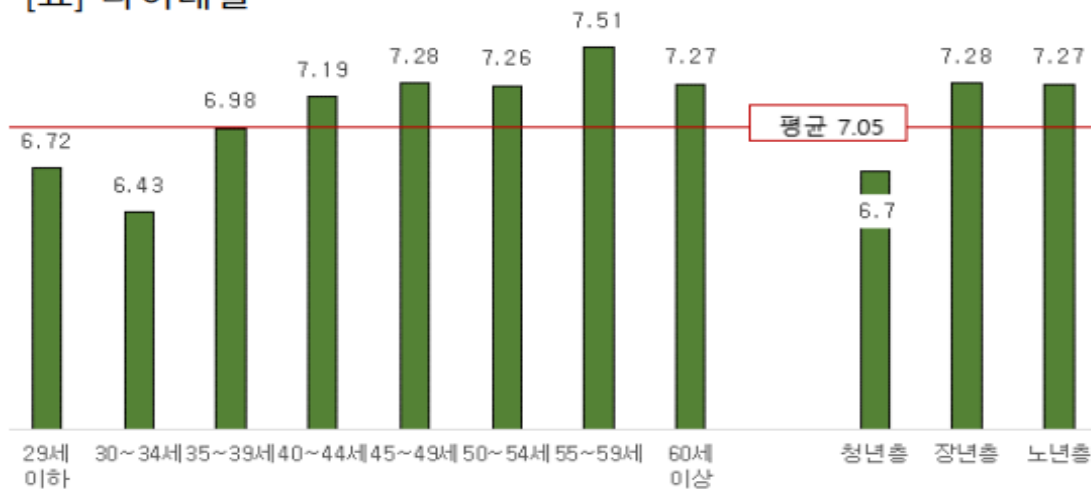
● 이 가운데, “매우 심각하다” **29.6%** / 심각하지 않다는 9.5%

✓ [참고] 통계청 사회조사(2020) 기후변화 불안하다 45.4%(매우 불안 7.4%, 약간 불안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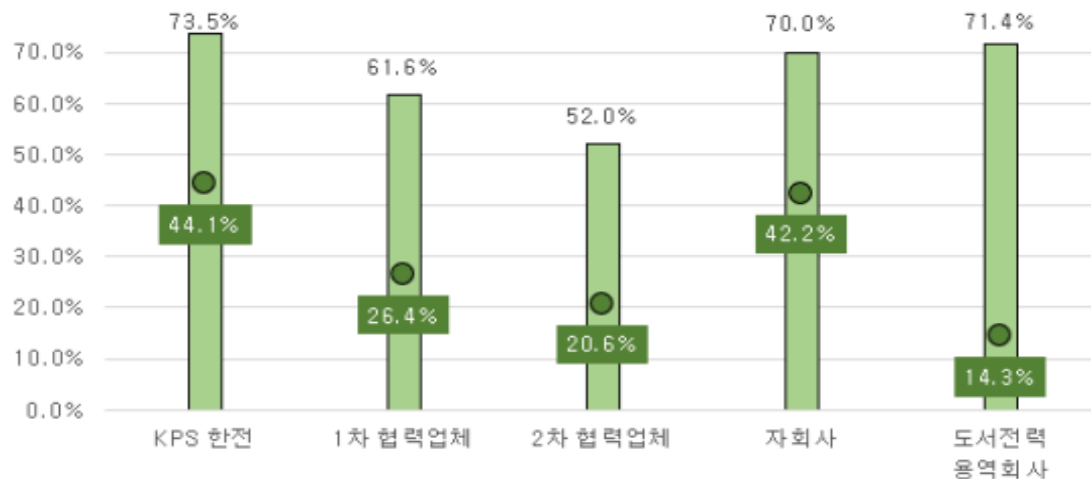
● 나이, 직종, 근무지, 회사에 따라 기후위기 인식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10점 만점 중  
7점

[표] 나이대별



[표] 소속회사 특성별



# 고용보장이 된다면 석탄화력 폐쇄정책 동의

## II. 조사결과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

### ■ 발전 비정규노동자 74.0%가 “고용이 보장된다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에 찬성”한다

#### ●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폐쇄정책 찬성

(집단간 차이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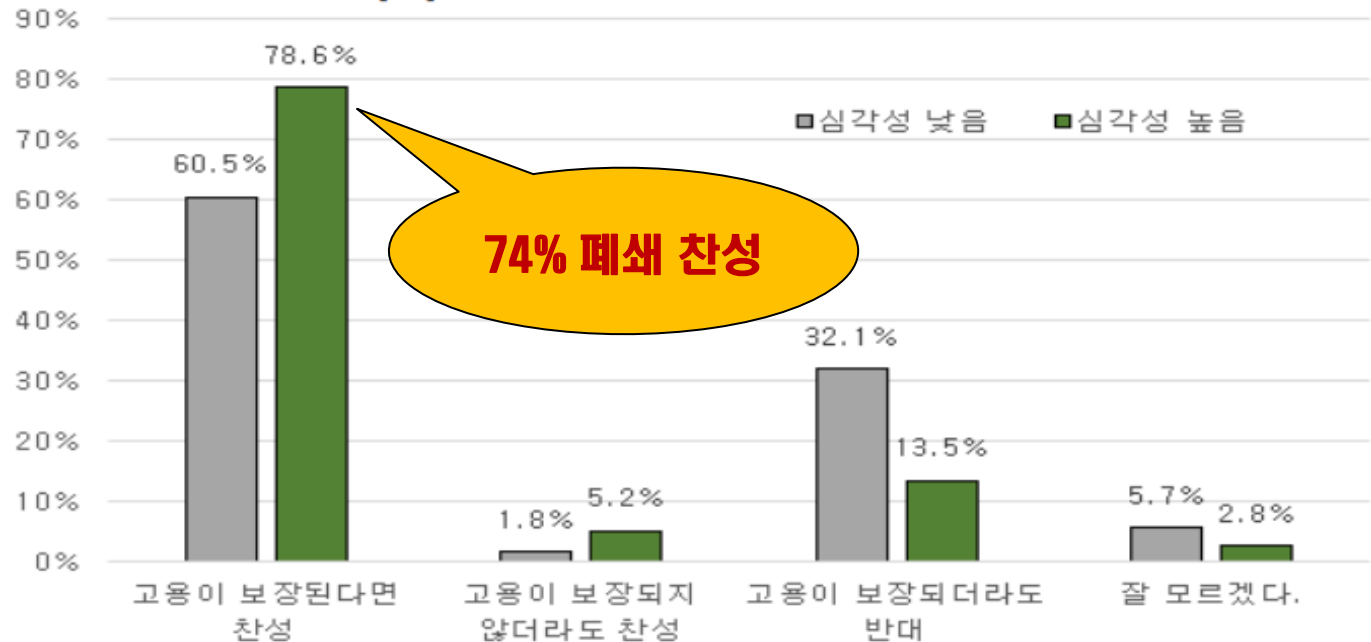
<고용이 보장된다면 폐쇄정책 찬성>

- ❖ 기후위기 심각성 높은 집단 78.6%
- ❖ 기후위기 심각성 낮은 집단 60.5%

<고용이 보장되더라도 폐쇄정책 반대>

- ❖ 기후위기 심각성 높은 집단 13.5%
- ❖ 기후위기 심각성 낮은 집단 32.1%

[표] 기후위기 심각성과 폐쇄정책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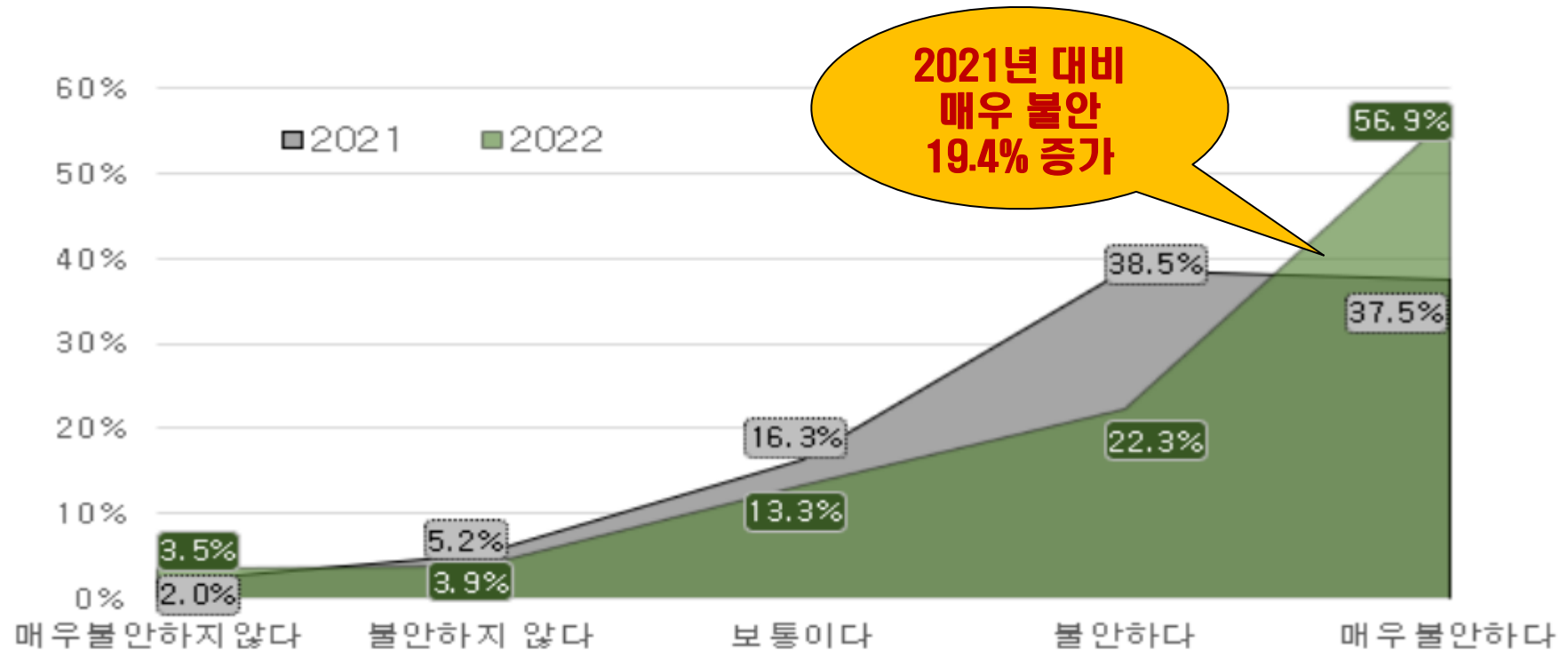


# 고용불안 79% ➡ 매우 불안 56.9%

## II. 조사결과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 인식

■ 2021년과 비교 :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는 발전 비정규노동자의 비중 **37.5% → 56.9%(19.4%p) 증가**

- 전체적으로 고용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중 76% → 79.2%



#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 국가정책의 주체로 대책마련

## II. 조사결과 :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고용주체

■ 비정규노동자의 83%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가 고용보장의 책임 주체라고 인식

- (우선순위분석) 1순위 : 국가(83%), 2순위 : 발전사(57.3%)



- ✓ 발전소 폐쇄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며, 국가 차원에서 총고용 보장 원칙 중요하다고 인식



# 연구용역을 통한 객관적 자료 필요

## □ 주요 조사내용

- 발전소지역의 산업·고용·경제 현황
- 폐쇄에 따른 LNG발전소 대체건설현황,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
- 발전소 폐지로 인한 산업·고용 환경 변화의 정량적 자료
- 지역의 산업·고용·경제 변화 전망
-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및 해소 방안 등
- 중앙정부 지원 요청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 □ 연구용역 노동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소통과 현장의견 반영

## 2. 발전소 노동자 등록제 도입

- ▶ 산업부, 고용노동부 노동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자체, 발전사 공유)
- ▶ 연령, 임금, 부양가족, 주거, 전환희망직종 등 민감정보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 및 폐쇄 후 사후관리 마련
- ▶ 선고용-후교육 도입

## 3. 실질적인 직무전환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 ▶ 재생에너지 계통의 자격증 취득과 산학협력반 운영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능사~기사
  - 에너지관리기능사~기사, 위험물산업기사-기능사, 용접
  - 안전관리(가스기능사~기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사)
- ▶ 귀농/귀어촌 지역산업 프로그램 개발 시급(지역인구감소 방지효과)

## 4. 자격증 취득지원과 연계한 취업프로그램 발굴

- ☞ 자격증 취득과정 정의로운 전환기금에서 업체 교육훈련비, 교육휴가에 따른 보상금 지원
- ☞ 자격취득 후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태양광, 풍력, 수소, LNG발전소)

## 5. 전환 재배치 시 이주대책과 정주조건 마련

- ☞ 전환 재배치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시 공공임대주택, 저리로 전세, 주택구입 자금대출 ➡ 중앙정부 에너지전환기금 요청과 금융기관 연계 지원
- ☞ 이주로 인한 자녀 교육지원방안(지역아동센터, 방가 후 지원)



# 실질적인 지원사례

현재 경남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장기 유급휴가 훈련 확대 적용 관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관련 추진 계획

- ▶ 이직자 취업 지원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특별취업지원팀 설치하고 실질적인 취업 및 관리
- ▶ 장기유급휴가 훈련은 코로나19 및 조선업 불황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업종의 핵심인력 고용유지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함('20.10월~)
- ▶ 향후, 수요 조사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관련 장기유급휴가 훈련 수요 발생 시 지원을 검토

불가피한 인력조정 시 사전 전직준비를 위한 방안 중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근로 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한다는 계획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

- ▶ 근로자는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 이때, 학업의 사유로는 학교 정규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을 포함함**
- ▶ 정부는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위라벨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15~) - **충남에서는 교육훈련비 지급 마련 필요**
  - \* 단축노동자 1인당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급)을 최대 1년간 지원( '22년 예산 241억원 )
- ▶ 따라서,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위라벨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6. 고용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주민 심리상담

### □ 수요조사를 통한 해당노동자, 지역주민 상담 신청서 작성

- ① 발전소 방문을 통한 전체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
- ②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방식 운영
- ③ 해당지역 홍보(지역신문),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안내

## 7. 중증적인 논의기구 구성과 협약-법제화

- ☞ 석탄화력발전소 2034년 28호기 폐쇄에 따른 사회적 논의기구 반드시 필요 [국회, 산자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이해당사자, 노조]
- ☞ 그린뉴딜 거버넌스 구축과 정의로운 전환협약, 고용보장 법제화 -에너지 전환 고용보장 지원법 필요, 지자체 조례제정



# 독일의 탈 석탄 실업 노동자 지원정책

## ▣ 고용조정지원금 지급<sup>5)</sup>

- 연방정부는 脫석탄정책 추진으로 실업상태에 직면할 석탄산업 및 화력발전사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조정지원금(Anpassungsgeld)’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 고용전환지원금은 2038년까지 예정된 脫석탄 일정에 따라 고용을 상실하게 될 석탄광 및 석탄·갈탄화력 발전소 근로자(연방정부 추산: 최대 40,000명)에게 공히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지급 요건 및 규모)** 脫석탄 추진으로 실업상황을 맞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최소 58세까지 최장 5년까지 고용조정지원금(48.1억 유로)을 지원하여 실업상황으로 인한 소득감축을 보전하며,<sup>6)</sup> 조기 은퇴에 따라 연금이 축소될 경우에 이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6조 4800억원



#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 예산안

구분	2020결산	2021 계획액		2022년도		증 감	단위: 백만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
총 계	924,219	1,411,814	1,411,814	3,178,030	2,653,574	1,289,093	913
6332 취약계층지원	99,636	107,890	107,890	141,498	127,952	20,062	186
노동전환인프라(6332-300)	-	-	-	8,000	5,700	5,700	순증
노동전환지원금(6332-301)	-	-	-	7,400	5,260	5,260	순증
사업전환고용 안정협약지원금 (6332-302)	-	-	-	5,000	5,000	5,000	순증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6332-400)	16,000	10,000	10,000	11,000	11,000	1,000	100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6332-401)	76,665	86,898	86,898	86,898	86,898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업종 전환지원(6332-402)	5,300	6,990	6,990	5,200	5,200	△1,790	△256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6332-403)	1,671	4,002	4,002	18,000	8,894	4,892	1220

150억  
전부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영 계획

## -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영 기본계획안

◆ 탈탄소화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I 추진 배경

#### [1] 현 황

- 정부는 '20년 6월 그린뉴딜 발표, 탈석탄 사회로의 이행 준비
  -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연간 58,775톤 / 화력발전소 전국58개 중 28개)하고 있는 등 에너지전환 시급

-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 12. 28.)에 따라 '20년 보령 1·2호기 폐쇄, 32년까지 12기 단계적 폐지 예정(태안1~6호, 당진1~4호, 보령5~6호)
  - '25년 4기(보령 2, 태안 2), '28년 1기(태안), '29년 3기(당진 2, 태안1), '30년 2기(당진), 32년 2기(태안)

-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대안을 모색하고자 충남형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프로그램 발굴·추진 중

#### [2] 기금 필요성

- (재정적 대비) 도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폐쇄될 예정으로
  -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산업 재구조화 등의 대책 및 예기치 못한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미래에 가용 가능한 재원을 적립해 둘 필요가 있음
- (운용 탄력성) 탈석탄 사회로의 이행과정은 관련 사례가 적고,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 및 사회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등
  - 자금 운용이 좀 더 탄력적인 기금 재원을 조성하여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 사례마다 신속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조성을 통해 주민피해 예방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사례 창출

### II 기금 개요

- (근 거)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에너지 전환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한다.

- (운용규모) 100억 원

- (기 간) 2021년 ~ 2025년(5년간, '25년까지 운용하고 필요시 연장)

연도별 조성계획(단위 : 억원)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0	10	15	25	25	25

- (기금재원) 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출금, 시·군 부담금, 기타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 (기금용도)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분석
  -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된 사업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전업 지원금 등)
  -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복지 사업 등
  -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발전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
  - 그 밖에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운용주체) 충청남도

직위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비고
담당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영 계획

## III 기금 조성 및 사용

### □ 기본방향

- (기금조성) 4개 시·군과 발전3사가 균등히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부담
- (기금사용) 화력발전의 폐지 시기에 맞춰 적기에 투입되도록 편성

### □ 기금조성

- (분담기관) 도, 4개 시·군(보령, 당진, 서천, 태안), 발전3사
- (조성액) 100억원 (도 30, 시·군 40, 발전사 30) (단위 : 억원)

구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100	10	15	25	25	25
도	30	3	4.5	7.5	7.5	7.5
보령	10	1	1.5	2.5	2.5	2.5
당진	10	1	1.5	2.5	2.5	2.5
서천	10	1	1.5	2.5	2.5	2.5
태안	10	1	1.5	2.5	2.5	2.5
동서발전	10	1	1.5	2.5	2.5	2.5
서부발전	10	1	1.5	2.5	2.5	2.5
중부발전	10	1	1.5	2.5	2.5	2.5

### □ 기금 사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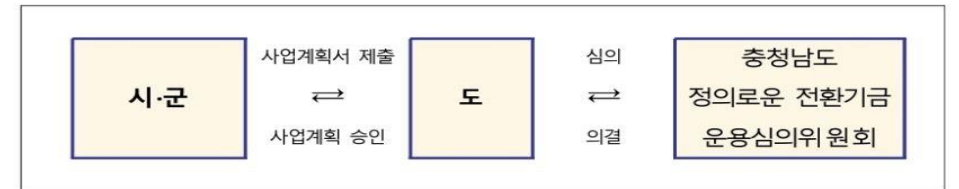
- (4개 시·군)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단위 : 억원)

구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5년 이후
세입액	100	10	15	25	25	25	
지출 총계	100	3	11	14	14	21	37
보령	25	3	5	5	5	7	
당진	25		2	5	5	7	6
서천	25		2	2	2	2	17
태안	25		2	2	2	5	14
잔액(누계)	0	7	11	22	33	37	

※ 발굴된 사업량에 따라 사용금액 결정(변경될 수 있음)

- (추진사업)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업으로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 시·군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체 사업
  - 국가 공모사업 추진 시 지방비 매칭 사업 등

- (지원절차) 해당 시·군이 사업계획서 제출 후 위원회 심의



## IV 세부추진계획

### □ 조성흐름

- ① 기금설치 운용 기본계획 수립 (2021. 4. 15.)
  - 에너지과
  - 시군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4.7.)
-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2021. 4. 30.)
  - 위원회 개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위촉장 수여
- ③ 기금 조성 협약 (2021. 5.)
  - 도지사, 시장·군수, 발전 3사 사장
- ④ 기금운용계획(안) 도의회 상정 (2021. 5.)
  -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 ⑤ 기금운용 개시 (2021. 7.-)
  - 기금 자금 조성(도·시군·발전3사 분담금) 및 사업추진

※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 추진(기금 전출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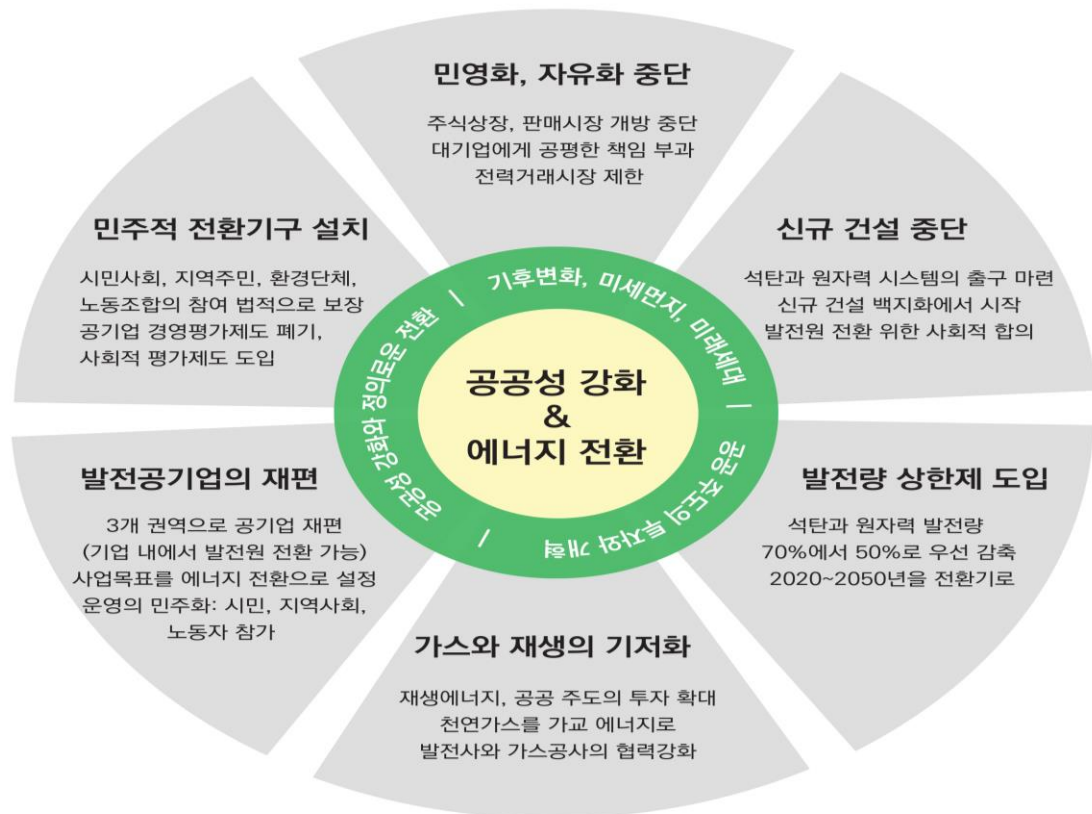
## 8. 민간 개방영역 공공성 강화 재공영화

- ▶ **민간-재벌-외국투자자본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금지, 중단**
- ▶ **발전공기업 통합 및 재공영화 추진을 통한 국가책임 일자리 관련 논의**
  - 지자체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발전공기업 통합 및 [가칭] 통합에너지 공기업 설립
  - 통합재생에너지 공기업 설립과 연동해 재생에너지 분권화 원칙에 부합하는 지방정부 공공재생에너지 체계 수립방안 마련
- ▶ **해고없는 전환을 위한 지역 충고용 보장-확대**



# 참고자료

##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



##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공기업 재편



## 충남 정의로운 전환 방향과 과제

이선숙(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보령행동 대표)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특별법, 강은미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녹색전환 기본법과 여타 의원들의 노력과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제 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영향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수단을 추진하는 기본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습니다.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사항도 구체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고 법정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을 하는 기구입니다.

중앙과 지역을 연계하는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도 하게 되는데 재원

은 ▲정부출연금 ▲타회계·기금 전입금,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이며 용도는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지원”이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으로 영향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로운전환 기금’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2.1.1 시행되며 기후변화영향 평가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인 22년 9월부터 시행되는데 기금용도에서 빠진 부분은 채워넣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어렵게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실행주체인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파열음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충청남도도 지역의 전문활동가들이 배제되고 지역의 제분야 당사자들이 배제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배제된 전문활동가들과 지역민과 현장의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 최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충남에 살고 있는 우리는 2030 탈석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정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앙의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전문활동가와 당사자 주체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지구 생태계와 인간사회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백지화를 비롯해 기존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겨 전환을 가로막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계획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은 사회 전체의 거대하고 심대한 변화와 전환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야 하는 전환의 과정은 그동안 배제되고 억압 받아왔던 이들이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권력을 독점해 온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을 명분으로 차세대 산업 성장 동력이라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정부가 앞서서 돕고, 충남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를 짓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또 다른 위기와 몰락으로 내모는 상황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의와 인권의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남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산업 전환이 되는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서산 동희오토 자동차 공장, 당진 철강, 서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 등 에너지를 넘어 충남 산업 전반의 전환과정 속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공백,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하루빨리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 지원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 충남,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후정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체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 지역민 등 전환의 주체가 참여해야만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당진 이인수센터장님이 언급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노동 전환에서 도입이 됐지만, 노동 전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환, 지역사회 지원, 복원 및 재생, 추진기반 조성 등을 통합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법정 기구인 충남탄소중립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최우선적으로 충남을 정의로운 전환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인수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정의로운 전환 정책추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에는,

“- 탈 탄소 전환

-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

- 환경피해 복원 및 기업의 책임 완수

-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

- 모든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

- 즉각적인 행동”을 기본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울산에서는 이미 조선포럼, 자동차 포럼 등을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산업전환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그간 여러모로 노력해 왔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충남을 정의로운 전환특구로의 지정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미세

먼지대책과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해 노력하며, 석탄 화력을 운전하던 노동자들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 발전노동자들의 책임있는 고용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충남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를 넘어 충남 산업 전반의 전환과정 속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공백,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내용을 제대로 담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을 견지한채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과 연대 및 실천행동을 지속적이고 가열차게 실천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제언 <당진시에너지센터 센터장 이인수 >

### < 정의로운 전환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제들 >

#### 1. 정의로운 전환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 □ 탄소 중립·녹색성장기본법보다 동 시행령이 더 소극적

- 탄소 중립·녹색성장기본법보다 오히려 동 시행령이 소극적인 부문이 많고 정의로운 전환 부분도 시행령이 더 소극적인 편이다.

#####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그릇된 인식들

- 정의로운 전환은 일자리 문제다.
  - 법규에는 포괄적 개념인데 시행령에서는 일자리 중심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도 일자리 중심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까지 함께 이뤄져야 함.
  -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노동 전환에서 도입이 됐지만, 노동 전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환, 지역사회 지원, 복원 및 재생, 추진기반 조성 등을 통합적으로 담아야 함.
- 정의로운 전환에서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만 거론되고 있다.
  -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있는데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 정의로운 전환을 특정 지역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정의로운 전환에서 특정 사업장 근로자만 걱정한다.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본사 직원보다 협력업체 직원과 주변 상가의 일자리 전환이 더 문제다.

#### 2. 정의로운 전환 제도 개선과 정책추진 방향

##### □ 정의로운 전환에서 '기후 정의', '에너지 정의' 가 전제

- 정의로운 전환에서 절차적(procedural), 분배적(distributional), 회복적(restorative)

정의를 원칙으로 ‘기후 정의’와 ‘에너지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서로 다르고 기후위기 극복과정 중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해야 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눔.
- 에너지 생산에서의 불평등과 에너지 배분에서의 불평등, 에너지 소비에서의 불평등을 해소.
  - 생산은 농어촌지역에서, 소비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하면서 지역에서만 환경적 재산적 피해를 감당.
  - 송·배전 비용을 수도권이나 지역이나 똑같이 부담.
  -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은 요금이 싼 전기를 쓰는 에너지 불평등 해소.
- 정의로운 전환 정책추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
  - 탈 탄소 전환
  - 노동자와 지역사회 지원
  - 환경피해 복원 및 기업의 책임 완수
  -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
  - 모든 이해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
  - 즉각적인 행동

## □ 정의로운 전환 제도 개선

- 지역별 정의로운 전환 조사 및 계획 작성을 의무화.
  - 시행령 72조 (고용상태 영향 조사 등)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상태를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정의로운 전환 전반에 걸친 기초조사와 정의로운 전환 계획 의무화 필요.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수정 필요.
  - 시행령 73조에 특구지정을 2년의 범위로 정하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최소 5년 이상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음.
  - 시행령 73조에 특구지정 신청을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특구지정이 절실한 지역이 당진과 보령, 태안, 아산, 서산, 서천 등 상당히 많은데 기후위기 대응 리스크 1위인 당진시가 사후 문제 해결형 행정적 특성상 오히려 후 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지정신청 단위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주관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고 광역시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정신청 주체를 이원화하여 명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중복으로 여러 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이라도 마련.
- 시행령 제74조에 명시한 사업전환 대상 업종에 빠져있는 에너지 부분을 포함.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 탄소 중립 · 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정의로운 전환 지원업무가 필요한 지자체들이 설치 ·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 정의로운 전환 정책 개선

-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새로운 프레임
  - 보호, 보상, 지원, 교정, 회복, 복원, 투자, 전환
-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빈곤, 불평등, 건강 등 광범위한 이슈를 해결
- 피해 계층은 물론이고 피해지역, 피해 산업까지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고 지원.
- 피해 보상이 아니라 피해 예방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
- 피해 보상보다 일자리 전환, 업종 전환, 사회 전환을 지원.
- 현장에서는 석탄 화력 중심으로만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철강과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농축산업 등 기후위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모든 업종으로 확산시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
- 자원 확보가 절실하다.
  - 정의로운 전환에 예산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 구체적인 예산지원이나 자원 마련에 관한 규정도 없고 이완 관련한 중앙 부처의 정책발표도 없는 상태.
  - 예산 확보 방향의 다양화 필요 : 새로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 예산의 전환도 필요 (농업부문의 예산을 수확량 증산->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예산으로)
- 정의로운 전환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영향 실태조사와 행정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구성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함.
  -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해 조사 범위와 피해 조사대상을 결정하고, 현황 파악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피해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에 관한 사전 연구 ·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
  - 국가나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함께 수립.



## 충남 정의로운 전환 추진 한계와 과제

- 조순형(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위 위원장)

### ■ 충남 정의로운 전환 추진 한계

#### ○ 시민사회 요구

- 정의로운전환 기본조례 제정
- 정의로운전환위원회 구성
- 전 영역 확대
- 당사자 참여 원칙, 당사자가 계획 수립
- 사회적 대화를 기본으로
- 통합적, 우선순위 고려한 사업

#### ○ 지방자치단체 추진 내용

- 정의로운전환 기금 조례 제정
- 정의로운전환 기금 운용위원회 구성
- 석탄화력 폐쇄, 에너지전환 한정
- 단기 성과 사업 중심
- 공모 사업 방식
- 기초지자체별 나눠 먹기

### ■ 충남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과제

#### ○ 중앙정부의 추진 방침 수립

- 정의로운 전환 추진 원칙
- 재정지원 규모 및 지원 선정 방식
- 법규 정비 : 정의로운 전환 특구 관련 법규 등

####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추진

- 당사자 참여 조직
-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 계획 수립
-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계획 수립

○ 지역에너지 공사 설립

- 재생에너지 입지를 발굴, 이익공유, 주민참여 방식 에너지전환 주도
- 일자리 창출

○ 노동전환에서 지역전환, 산업 전환으로 확대

- 시군단위 정의로운전환 논의(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환, 정의로운전환 기금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역할 강화
- 일자리 문제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설계(지역, 산업 전환)





## 토론문

### 여형범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현재 정의로운 전환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1.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관련

-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특별지구의 지정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이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기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제도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임)
- 하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산업/고용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제도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음(석탄화력발전소 입지지역의 경우 길게는 2040~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발전소들이 폐쇄되기 때문에 최대 5년이라는 지정기간 규정은 해당 지역의 피해에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 입지지역의 경우 대부분 발전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산업위기/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환 역량'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추진해갈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또한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이전에 산업전환-노동전환-지역전환을 위한 제반 제도를 정비하고 준비하는 준비단계부터,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의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전환-노동전환-지역전환을 지원하는 전환단계를 거쳐, 에너지 전환 이후 (기존 산업기반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새로운 산업기반이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추진하는 회복단계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표 및 내용은 단계적으로 상이할 것임
- 탄소중립기본법에 포함된 특별지구의 지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1단계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지원과 함께 지자체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을 지원한

후, 2단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된 지자체 정의로운 전환 계획과 사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 사이에 ‘정의로운 전환 협약’을 체결한 후 지방정부가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함 (고용안정선 제적대응패키지지원사업이나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의 정책 변화 사례)

## 2.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영 관련

-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에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지원”이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으로 영향 받는 노동자와 지역 사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로운전환 기금’에 대한 규정은 빠져 있음
- 반면, 독일의 경우 탈석탄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법률(석탄 지역의 구조 강화법)에서 석탄광산과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석탄지역을 위한 예산(400억 유로), 대상지역, 예산 배분액, 지원 대상 사업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충청남도, 2021, 157~162쪽 참조)
-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줄어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전력기반기금)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기준을 확대하거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운용 방법을 개선하여 지자체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지역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민간 녹색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녹색금융 사업의 지역재투자 활성화 제도를 통해 지역의 자원(사람, 돈, 자연 등)을 이용한 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부와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탄소중립전략은 기존 산업 내 또는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없어지는 산업/일자리와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일자리는 시·공간적으로 미스매칭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석탄발전·자동차·철강 등 기존 고탄소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입지한 반면, 태양광·풍력·그린리모델링·그린모빌리티 등 신규 저탄소 산업은 모든 지역에 분산되어 입지하거나 지리적 위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주거, 교통, 문화, 복지, 환경 등 생활 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아닌 빠져나가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짐
- 또한 지금까지 탄소중립전략을 위한 전략과 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 역량을 증진하는데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단체와 주민들은 탄소중립전략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 탄소중립전략 추진을 위한 개별 사업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주민참여형, 지자체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를 넘어서, 지역의 자원(사람, 돈, 자연 등)을 이용한 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부와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별 혁신 거점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라는 제한된 공간적 범위를 넘어 주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부(wealth)를 창출하고 보존하는데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음(혁신도시 시즌2의 문제의식)
-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역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로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부산시의 경우 2021년 5월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차원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음
- 현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재투자 활성화 관련 제도를 국내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인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금융활성화 정책의 지원을 받는 산업

및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의무화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재투자 활성화 제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4. 녹색일자리 보장제 도입 방안 검토

-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잃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색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녹색일자리란 재생에너지, 녹색건축물 등 생산하고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기후·환경 친화적인 일자리(결과 측면), 오염저감, 에너지 효율 개선, 자원순환 등 제품 및 서비스 생산과 공급 과정이 기후·환경 친화적인 일자리(과정 측면),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일자리(좋은 일자리 측면)임(ILO, 2013)
- 기존 산업의 기후·환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탄소중립전략에 따라 기존 산업에서 조기 퇴직 및 이직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녹색일 자리를 제공하거나 다른 괜찮은 일자리로 이동하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색일 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녹색일자리 보장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녹색일자리 보장제’는 기존 산업에서 조기 퇴직 및 이직해야 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거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 여성, 농민, 장애인, 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녹색일 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1)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일자리가 좋은/괜찮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진행, (2)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일자리가 좋은/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3) 기존 산업의 조기 퇴직 및 이직자, 청년, 여성, 농민, 장애인, 홈리스 등을 위한 기존 녹색일자리 개선 및 신규 녹색일자리 창출, (4) 정부 및 지방정부가 지역에너지공사, 지역환경공단 등을 설립·운영하여 녹색 일자리를 직접 공급·관리하거나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의 녹색 일자리 공급·관리 지원이 필요함

## 탄소중립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이제는 노동전환 지원이다!

###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화 과정에서 무시되었던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음
  - 이에 친환경,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등의 정책을 펼치며 산업구조까지 전환하고 있음
- 하지만 환경의 현실과 노동자의 일자리가 양립하기 위한 체제 전환, 산업/사회적 변화가 절실한 상황임
- 충남의 경우 국내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의 가장 큰 비중(33%)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전국 58개 중 28기)이 있음
  - 석탄화력발전소의 존재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 하지만 발전소 및 하청업체 종사자들이 있어 해당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함
- 그러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극대응하고자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
  - 2020년 12월 30일 36년 이상 충남과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해온 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를 폐쇄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불 문제가 아님
  -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문을 닫은 보령시의 경우 인구 10만명이 무너지는 계기로 인식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위축과 보이지 않는 실업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됨



- 한국노총 공공노련에 따르면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인원은 총 2만 2천명이며, 절반에 가까운 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지난 2월 15일 진행된 의정토론회(안장헌 의원 신청)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2030년 기준 전기차 생산비중이 45%를 넘어가면 전체 고용인원의 30%가 직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 충남은 노후화력발전소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더 늦기 전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인한 산업전환에 대비한 노동자 지원책이 절실함
- 2021년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에서 진행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현재의 일자리가 기후위기 및 그로 인한 산업전환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답변함
-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우리 충남은 2021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장헌 의원 대표발의)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해당 기금을 운용 중임
- 2025년까지 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지원책은 부족함
- 이에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헌 의원 대표발의)를 제정하여 노동자 보호 문제에 사전 대응할 예정
- 해당 조례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과 함께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탄소중립 정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구체적인 양과 질에 대한 내용이 불확실한 반면 산업전환 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세부정책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환에 수반될 수 있는 피해 예방 및 일자리와 지역 전환 계획을 병행하고, 현 고용영향 평가제를 발전시켜 전환을 뒷받침할 ‘산업전환 고용영향 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함
  - 중장기적 전환 과정과 세부 정책 실행 속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지역 시민사회가 정책 수립과 집행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에너지위원회나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시급히 구축하고 시행해야 함
- 민선 8기 도정의 과제인 탄소중립특구가 산업적 준비를 통한 경제적 관점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목표가 함께 설정되어야 함.

##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11.] [충청남도조례 제5191호, 2022. 4. 1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산업·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및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와 지방정부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지역별·직업별·직무별·성별·연령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지역별·성별·연령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7조(노동전환의 지원)**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8.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노동자단체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업종 관련 노동자단체·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노동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7조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의 기준과 대상 및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대·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충청남도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 및 이·전직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거나 개편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노동전환 방안 컨설팅
3.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신청 지원
4.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 상담·교육 및 심리안정지원
5.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가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 ①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전환의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지역·직무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업종의 지정
4. 노동전환 지원정책,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노동정책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업종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업종의 범위 및 조치방안
2. 노동전환 지원업종의 노동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노동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